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IMF, 암호화폐 정책 9대 핵심 요소 제시...‘법정화폐 불인정’이 1순위
2. WEF, 블록체인 성장조건으로 사이버보안 강조..4개 요소 제시
3. 연준-DIC-OCC, 은행 상대로 암호화폐 기업 예금 유치 위험성 경고
4. 美 블록체인산업협회, 백서 통해 ‘스테이킹이 증권’이라는 견해 부정
5. FDIC, 美 136개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이해 상충 금지 규정 확대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IMF, 암호자산 정책 9대 핵심요소 제시...‘법정화폐 불인정’이 1순위

- 암호화폐 확산, 통화정책 효율성 저하, 법적 모호성 증대, 소비자 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
- 암호화폐에 대한 통화 인식 차단, 법률 개혁 수반한 포괄적 규제, 해외 관할권 규제 메커니즘 개발 권유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에 암호자산 정책 수립에 대한 9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통화 정책 체계를 강화해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고, 암호화폐에 공식화폐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 것을 권고

▶ IMF, 암호자산 정책에 대한 9대 핵심요소 제시...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암호자산 세금 규정 등 제시

- IMF 집행이사회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회원국에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 핵심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
 - * Elements of Effective Policies for Crypto Assets, 2023.02.23
- IMF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소가 붕괴해 암호화폐 정책이 규제 당국의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고 경고
 - * 기업, 시민, 공공기관의 디지털 기술 도입에 중점을 둔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체 예산이 75억 유로에 달하며 유럽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구체화하여 모든 사람,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함
- IMF는 정책 방안 중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해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공식 통화 및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
- 이외에 ▲과도한 자본 흐름에 대한 보호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세금 규칙 및 법률 채택 ▲모든 암호화 시장 행위자에 대한 감독 요구 사항 개발 및 시행 등을 강조
- 백서는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조정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3대 범주, 9대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규제 당국의 정책 개발 역량 확보와 다양한 논의 진행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
- 프레임워크는 ▲거시 금융 부문의 효과적 통화 및 재정 정책 ▲법적 명확성 확립을 통한 규제, 감독, 감독 요건 수립 ▲암호자산의 역외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조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 및 관련 기술의 혁신 잠재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
- IMF는 2021년 말 엘살바도르가 중앙아메리카 국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뒤를 이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2022년 4월 비트코인 공식 통화 채택이 통화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
- IMF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감독 강화 ▲규제 시행을 위한 국제적 조치 수립 ▲암호화폐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IMF 이사회는 보고서가 제시한 암호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하고 자본 흐름 관리 조치를 우회해 재정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자산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

▶ 암호자산 규제, 금융 무결성·금융 안정성·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요소...암호화폐 진화를 고려한 정책 필수

- 암호자산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효율적인 공공 정책 시행은 최근 들어서야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암호자산이 수년 동안 틈새 제품에 머물다 때에 따라 갑자기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
- 백서는 회원국에 암호자산의 증가 및 관련 위험 대응에서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시장 및 금융 무결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핵심요소를 제시
- IMF는 암호자산의 장점으로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 결제, 금융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아직 대다수가 구현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강조*
* 백서는 무허가 블록체인에 게시된 거래에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며, 지난 3년간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중간값은 \$2.72였고, 비트코인 거래 중간값은 \$93.61로 수수료가 거래액의 2.9%에 달하며, 이는 대다수 디지털결제 및 송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 반면, 암호자산에 대한 위험의 중요성과 관련성은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시 경제적 위험(통화 정책 효과에 대한 위험, 자본 흐름 변동성 및 재정 위험 등)은 물론, 금융 안정성과 무결성,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공정 경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
- IMF는 백서 전반에서 암호자산 생태계가 정책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화한다고 강조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연하고 새로운 개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 암호자산 규제 목적에 따라 암호화폐 정의 및 분류 상이, 기반 기술 잠재력에 대한 이해 필요 강조

- 암호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해 암호로 보호되고 배포되는 개인적으로 발행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 정의하고, ▲백업되지 않는 토큰(비트코인 등)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및 보안 토큰 등 기타 토큰으로 분류
- 암호자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정의는 없다고 강조하고, 각종 디지털 기술 규제 법률에서도 암호자산 정의는 다양하고 법률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소개
- EU MiCA는 암호자산을 정의했지만, 스위스는 정의 없이 법률을 도입했고, 리히텐슈타인과 우크라이나는 일반적 목적을 위해, 인도는 과세를 목적으로 디지털자산 범주를 더 폭넓게 정의했으며, 싱가포르의 기존 결제법 보완을 위한 경제적 목적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정의함
- 국가마다 암호자산 정의가 조금씩 달라, EU MiCA는 법정화폐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암호자산으로 분류하지만, 일본은 암호자산 정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함
- 암호자산의 기반 기술인 분산원장은 구성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아키텍처를 통해 민간 영역 혁신 촉진과 코드 재사용과 조합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명시
- 거래 원장 및 노드의 여러 복사본이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은 중앙집중 방식보다 여러 노드가 작동하지 않거나 멈추더라도 계속 실행이 가능해 더 높은 운영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
- 또한 암호자산이 액세스를 늘리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등의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은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

▶ **암호화폐 확산시 통화 정책 효율성 저하 위험, 법적 모호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 고조**

- (잠재적 위험) 기업과 가계가 국내 명목화폐에 고정되지 않은 암호자산 저축이나 투자를 선호하면, 통화 정책 효율성과 전달이 크게 약화되고, 자본 흐름의 규모와 변동성에 영향을 미쳐 국가 대응 능력을 제한
- (재무 안정성 및 재정 건전성)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 지원하지 않는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성 위협을 초래하고, 암호자산의 급격한 가격하락은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며, 익명성 특성으로 인해 암호자산이 범죄자에게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큼
- (법적위험) 암호자산의 법적 분류와 기존 규정 적용에서 법적 불확실성은 잠재적 법적 위험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적용의 불확실성은 대규모 재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위험은 소비자와 투자자가 암호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부적절한 거버넌스 ▲불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불충분한 규제 등에서 비롯됨

▶ **거시 금융, 법적 확실성, 글로벌 협력 등 9대 핵심요소 제시...전면 금지보다는 포괄적 규제를 권유**

- 이러한 위험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의 9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거시 금융 위험(1~3) ▲법적 확실성(4~6) ▲글로벌 조정 및 협력(7~8)로 구성

[IMF의 암호자산 정책 9대 핵심요소]

구분	목적	내용
1	거시경제 고려사항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 암호화 자산에 공식 통화/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
2		-통화주권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을 방지하고, 자본 흐름 관리 조치의 효율성을 유지
3		-자본 흐름 관리 및 재정 정책 재정 위험을 분석 및 공개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명확한 세금 처리를 채택
4	법률, 규제 및 감독 고려사항	암호자산의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고, 법적 위험을 해결
5		-법적 확실성 / 재무 안정성 모든 암호화폐 시장 플레이어에 대한 건전성, 수행 및 감독 요구 사항을 개발하고 시행
6		-소비자 보호 / 시장 무결성 다양한 권역의 규제 당국 및 기관과 공동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
7	글로벌 조정 및 국제 금융기관 역할	암호화 자산 규정의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협정 수립
8		암호자산이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9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대체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출처 : IMF, Elements of Effective Policies for Crypto Assets, 2023.02.23

- 9가지 핵심요소는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조정된 프레임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며, 정책 입안자는 암호자산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

▶ **(거시경제 고려) 통화주권과 안정성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요소...암호화폐의 통화 인식 차단을 강조**

-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통화주권과 안정성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요소라고 강조하고, 암호자산 통화 대체를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통화 프레임워크와 통화 신뢰성을 유지하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권고
- 거의 모든 화폐 법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급수단의 발행을 국가의 임무로 인식하며, 고품질의 공공 지불수단(재무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 및 동전)만을 화폐로 인정

- 암호자산이 보유한 근본적 위험을 고려할 때 백업되지 않은 암호자산, 사적으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 자산은 이와 다르다고 강조
- 정책 입안자는 암호자산 채택으로 발생하는 자본 흐름 측정(CFM)의 잠식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금융 부문의 재정 위험에 대해 정부 재정 관리의 일환으로 분석, 정량화, 공개 및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권고

▶ **(법적 확실성)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법률 개혁 수반을 강조...전면적 금지보다는 포괄적 규제가 적합**

-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기 위해 관할권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법률 개혁을 수반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와 국제기구 지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면허,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암호자산의 보관, 이전, 교환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적립금과 함께 금융 서비스 업체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규칙에 따른 요구 사항의 개발 및 시행
- 이때 암호화폐는 높은 수준의 익명성 지원 및 환경적 부담 발생과 같은 외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적인 금지보다 포괄적 규제가 적합하다고 권고
- 당국 간 공동 모니터링 설정은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포괄적 규제가 최선이지만, 제약된 상황에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접근이라고 강조

▶ **(글로벌 협력)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서비스 특성 반영, 해외 관할권 기업 규제 메커니즘 개발 필요**

-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규제 차익 거래를 최소화하고, 규제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 보장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
-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조정된 규제 접근은 국제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외국 관할권에 있는 암호자산 기업을 승인·규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당국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정책 입안자들은 복잡한 글로벌 환경에서 암호자산이 제기하는 도전과 기회를 잘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암호자산이 국제 통화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

- IMF가 회원국에 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위한 9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가장 먼저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를 통한 통화주권 강화와 암호화폐의 공식 화폐 불인정을 권고
- IMF는 9가지 핵심요소를 거시 경제요소, 법적 명확성, 글로벌 협력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법률 개혁을 수반한 포괄적 규제 적용과 해외 관할권 기업 규제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권유

[출처]

- Reuter, IMF lays out crypto action plan, recommends against legal tender status', 2023.02.23.
- IMF, Elements of Effective Policies for Crypto Assets, 2023.02.2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WEF, 블록체인 성장조건으로 사이버보안 강조...4개 요소 제시

- 블록체인, 당사자 간 정보공유 및 가치 교환에서 가장 큰 효용...지속 성장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이 필수
- 합의·개인정보보호·개인키·스마트계약 등에 취약점 존재...평가 및 테스트, 모니터링 시스템 필수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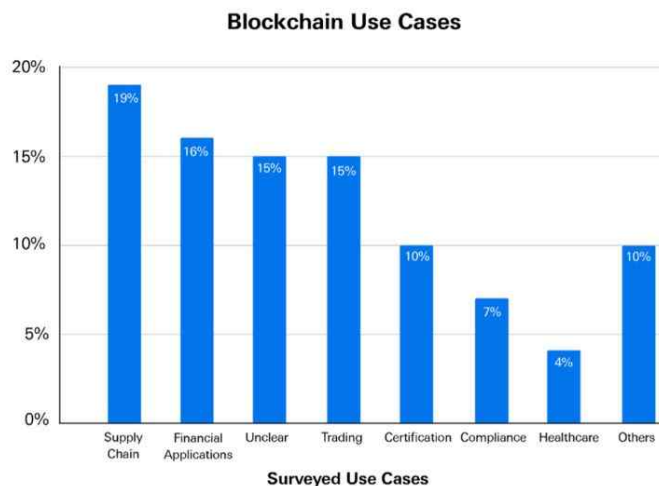
WEF가 블록체인이 암호화와 같은 보안 기본요소를 사용하지만, 아키텍처를 보호하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합의 프로토콜 위협 ▲개인정보 및 기밀성 침해 ▲개인키 유출 ▲스마트계약 결함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이버위협 4대 요소로 제시

▶ **블록체인, 당사자 간 정보공유 및 가치 교환에서 가장 큰 효용...지속 성장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이 필수**

- WEF는 블록체인을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분산형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비즈니스를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한다고 강조
- WEF는 PwC 자료*를 인용해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GDP를 1조 7,600억 달러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당사자 간의 정보공유 및 가치 교환 촉진에 사용된다고 강조

* PwC, 'The trillion-dollar reasons to rethink blockchain'

[블록체인 사용 사례]



출처 : WEF, 'Is blockchain really secure? Here are four pressing cyber threats you must consider', 2023.02.21.

- 이러한 블록체인 탈중앙화는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및 가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당사자 신뢰 구축과 중개자 제거를 통해 달성된다고 설명
- 현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와 같은 보안 기본요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규모 아키텍처를 보호하고,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WEF는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도입될 충분한 장점을 보유했지만, 한층 새로운 사이버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도입 활용에서 사이버보안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 WEF는 블록체인이 랜섬웨어, 사기,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 활동 지불수단으로 쓰인다고 지적하고, 해당 금액이 '21년 기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

- 블록체인은 검증된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구축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전통 암호화 기술은 날로 다양한 사이버보안 위협을 견디기에 불충분하다고 강조
- WEF는 '20년 10월 기준 암호화폐를 겨냥한 500건 사이버 공격으로 9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블록체인은 개방 및 분산화 특성으로 사이버보안 보장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
- 블록체인의 개방 및 분산화 특성으로 운영 복잡성 증가와 제어 능력 감소로 사이버보안 위협이 크게 높아져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설명

▶ 합의·개인정보보호·개인키·스마트계약 등에 취약점 존재...평가 및 테스트, 모니터링 시스템 필수 권고

- 블록체인은 합의, 스마트계약, 네트워크, 엔드 포인트 콜라이언트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대규모 아키텍처로 운영되며, 이런 계층은 사이버 공격 표적이 되어 다양한 취약점을 노출한다고 지적
- WEF는 이를 반영해 ▲합의 프로토콜 위협(Consensus protocol threats) ▲개인정보 및 기밀성 침해(Breach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개인키 유출(Compromising of private keys) ▲스마트계약 결함(Smart contract defects)을 4대 사이버 위협으로 제시
- **(합의 프로토콜 위협)** 블록체인은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해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때 참여자 간 합의를 하지만, 이를 감독할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합의 프로토콜의 취약점은 각종 사이버위협으로 작용
- 가령, 다수(51%)* 또는 이기적 채굴* 공격 등 다양한 공격 벡터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제권이나 합의 결정권이 바뀔 수 있는 위협이 발생
 - * Majority attack : 공격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트랜잭션을 판매자/네트워크에 제출하는 동시에 이중지출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체인 포크를 비공개로 채굴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공격
 - * Selfish Mining : 한 명의 마이너 또는 그룹이 해시를 해결하고 새 블록을 열고 이를 숨겼다가, 정상적인 블록이 생성될 때 이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다른 사용자 암호화폐를 훔치는 방식
- 그러므로, 합의 프로토콜은 항상 예상된 해결방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평가하고 테스트 해야 한다고 권고
- **(개인정보 및 기밀성 침해)**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기밀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추론이 가능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공유 및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블록체인 도입 기업은 블록체인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허용된 데이터만 공유하는 시스템 구현을 추진해야 하며 적절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
- **(개인키 유출)** 블록체인이 참여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개인키의 유출 및 손상 가능성도 중요한 위협으로 지적
- 공격자는 피싱(phishing)이나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과 같은 고전적 사이버 공격이나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SW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계정 및 개인 키를 훔침

- 2017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취약한 보안관리를 겨냥한 해커 공격으로 5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자산을 도난당함
- **(스마트계약 결함)** 공격자가 스마트계약의 결함을 악용하는 공격으로, 최근 빠른 확산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탈중앙화 조직(DAO)을 노린다고 경고
- 2016년 블록체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DAO에서 6천만 달러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 스마트계약은 최대한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비즈니스 및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한 평가와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권고

▶ **블록체인 보안 모델을 통한 교육, 사이버보안 평가 프로세스 구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대안으로 제시**

- WEF는 블록체인 보안을 위해 ▲업계 모범 사례를 통한 교육 및 훈련 ▲사이버보안 평가 프로세스 구현 ▲새로운 위협과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권고
- 가트너의 블록체인 보안모델 등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고, WEF가 개발한 5단계 사이버보안 평가 프로세스 등을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 위기관리 및 보안 정책과 일치하는 보안목표 정의, 잠재적 위협과 기존 취약성 발견, 보안 제어 및 거버넌스 프로토콜 개발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WEF는 블록체인은 새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 기술로 성숙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악용하려는 행위자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블록체인 수용 전에 사이버보호 장치를 도입해 기술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

[WEF의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의 5단계 접근 방식]



출처 : WEF, 'Cybersecurity Module'

- WEF가 블록체인은 당사자 간 정보공유 및 가치 교환에서 가장 큰 효용을 창출한다고 강조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합의 프로토콜, 개인정보보호, 개인키, 스마트계약 등에서 취약점이 존재하며, 블록체인 보안모델을 통한 교육, 사이버보안 평가 프로세스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대안으로 제시

[출처]

- WEF, 'Is blockchain really secure? Here are four pressing cyber threats you must consider', 2023.2.2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연준·FDIC·OCC, 은행 상대로 암호화폐 기업 예금 유치 위험성 경고

- 암호화폐 기업의 고객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예금으로 유치한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경고
- 암호화폐 기업의 예금 실사, 자금 유동성 관리, 상호연결성 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강조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특정 자금출처가 은행의 유동성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월에 이은 2차 경고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됨

▶ 암호화폐 기업의 예금 관련 실사, 자금 유동성 관리, 상호연결성 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강조

- 미 3개 금융 규제기관이 암호화 자산 관련 특정 자금을 예금으로 예치한 은행은 예금 유입 및 유출의 규모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 위험 자금 예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고객 자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위한 예치금 등을 제시하고, 해당 자금원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위기관리를 주문
- 3개 규제기관은 이들 자본의 예금 안정성이 거래 상대방인 암호화폐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변동성, 암호자산 산업의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
- 뿐만 아니라, 암호화 자산 관련 시장 이슈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 예금보험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 보도로 인한 고객 혼란으로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
-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와 스테이블코인 보유 기업에 대한 신뢰, 발행자의 준비금 관리 관행 등에 의해 예금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예상치 못한 환매나 암호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은 해당 자금이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금 관련 상호연결성을 평가, 자금 유동성 평가 및 통합관리, 강력한 실사 수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로이터 등 외신은 이번 성명이 은행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부과하거나 특정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연이은 경고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
- 한편 지난 1월의 1차 경고는 은행이 암호화폐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을 강조함

- 연준과 FDIC, OCC 등 미 금융 규제기관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기업의 고객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자금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은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금의 상호연결성 평가, 암호화폐 기업 실사, 자금 유동성 평가 및 통합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

[출처]

- TDR, 'Federal Reserve And FDIC Warn About The Risks Crypto Poses For Member Banks', 2023.2.2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블록체인산업협회, 백서 통해 '스테이킹이 증권'이라는 견해 부정

-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창고영수증·선하증권과 동일한 소유권 증명으로 규정...SEC 주장을 정면 반박
- 이익을 공유하는 제3자가 없어 별도 실제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투자 계약도 증권도 아니라고 결론

미 블록체인산업협회(POSA)가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백서 2종을 발표하고, 스테이킹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

▶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창고영수증·선하증권 등과 동일한 디지털세계 무형상품 소유권 증명이라 규정

- POSA가 10여 개 이상의 산업 전문가와 공동으로 미국 증권 및 세법에서 규정한 예금 토큰을 검토한 2종의 백서를 발표하고, 스테이킹이 증권이라는 미 규제기관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
 - POSA는 유동성 스테이킹(Liquid staking)을 블록체인에서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해 양도 가능한 영수증 토큰을 발행해 스테이킹 된 암호화폐 자산의 소유권 및 스테이킹 보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규정
 - 해당 토큰을 흔히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상품(liquid staking derivatives)으로 지칭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용어라고 지적하고,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iquid staking tokens)으로 부를 것을 제안
 - 또 현재 미 재무부나 국세청이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POSA는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미국 연방소득세 분석'에서 일반적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 영수증 토큰은 물리적 세계에서 유형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창고영수증, 선하증권, 도크 보증서, 기타 소유권 증거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세계의 무형상품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강조
 -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이익을 공유하는 제3자가 없어, 별도 실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되며, 현물이나 다른 자산과 교환 등 판매 및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보고서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널리 알려진 하우이 테스트*의 사례분석의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유동성 스테이킹은 투자 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도 아니라고 결론
- * Howey test : 거래의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로 거래가 투자 계약으로 판명되면 해당 거래는 증권으로 간주함

- 미 블록체인산업협회가 암호화폐 관련 입법 체계 및 자율 규제 논의 확산을 목적으로 유동성 스테이킹 관련 2종의 백서를 발표하고, 스테이킹은 증권이라는 미 규제기관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
-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창고영수증, 선하증권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지털세계의 무형상품 소유권이라고 강조하고, 암호자산 판매나 처분이 이뤄질 때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Cointelegraph, 'Proof of Stake Alliance publishes white papers on legal aspects of liquidity staking', 2023.2.2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FDIC, 美 136개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이해 상충 금지 규정 확대

- 시중은행,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및 교환 서비스 제공...디지털자산 변동성 및 이해 상충 우려 증대
- 암호화폐 보유한 직원, 암호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안 관여 금지...정부윤리처 규정을 확대 적용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연례보고서*에서 美 136개 은행이 암호자산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때문에 은행의 이해 상충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Top Management and Performance Challenges Facing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23.02

▶ 시중은행,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및 교환 서비스 제공...디지털자산 변동성 및 이해 상충 우려 증대

- FDIC는 미국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은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부터 암호자산 기업의 은행예금, 암호자산의 보관, 대출 등 각종 교환 서비스 제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
- FDIC는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하는 캘리포니아 은행 '실버게이트'를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 변동성 위험을 강조
- 실버게이트는 예금 90%가 디지털자산 기업 고객 자금이었으며, 119억 달러에 달하던 예금이 불과 한 분기 만에 38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극심한 변동성을 지적
- 보고서는 실버게이트가 유동성 위기로 52억 달러 채무증권을 7억 1,8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매각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은행이 거둔 총수익보다 더 큰 액수라고 설명
- FDIC는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연방준비제도, 통화감독청(OCC)과 공동발표한 암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해 상충 우려를 새로운 리스크로 제시
- 정부윤리처(USOGE)*가 지난해 중반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직원에 대한 이해 상충 규정을 도입한 점을 강조하고, 업무가 암호화폐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
- * United State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 연방 행정부 간부와 직원의 이해 상충 규정을 담당하는 독립기관
- FDIC는 직원이 이더리움을 보유한 경우, 이더리움 디지털자산 검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고, 은행의 디지털자산 참여 증가로 이해 상충이 없는 직원 배치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FDIC는 2018년부터 디지털자산을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

- FDIC가 미 136개 은행이 암호자산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 변동성 위험 증가와 함께 이해 상충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 FDIC는 미 정부윤리처가 도입한 암호화폐 이해 상충 규정을 은행에 확대 적용해 이더리움 등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직원은 해당 디지털자산 검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도입

[출처]

- Ledger Insight, 'FDIC says 136 banks engaging, planning crypto activities', 2023.02.22.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美, 암호자산 규제로 업계 재편 가속...탈미국 추세 속 아시아 부각
2. BIS, 글로벌 은행 20% 암호자산 취급...전체 위험 비중에서 1% 미만
3. 美 상·하원 의원, SEC 'SAB 121' 지침 비난...소비자 보호 외면 지적
4. 호주중앙은행, CBDC 파일럿 착수 발표...6월 결과 발표 예정
5. 美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규정 도입 추진...연방법 지체로 자체 도입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美, 암호자산 규제로 업계 재편 가속...탈미국 추세 속 아시아 부각

- SEC, 연준, FDIC, OCC, 州 정부 등 전방위 규제...암호자산 넘어 메타버스 등 유관 분야까지 위축 지적
- 암호자산의 탈미국 움직임, 암호화폐 허브 경쟁 촉발...영국, 홍콩, UAE 등을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

SEC의 암호자산 강력 규제가 연준·FDIC·OCC 등 규제기관 전반으로 확대되어 암호자산 생태계는 물론 유관 산업 환경까지 악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기업의 미국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 의회, '21년부터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나섰지만 대부분 좌초...SEC가 증권규제 권한 앞세워 전면 등장**

- 미국 암호자산 규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고 있으며, 개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암호자산의 위험성과 규제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암호자산 업계의 최대 기피인물이 됨
- 미 의회와 정계는 '21년부터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에 나서 각종 법안이 발의*됐으나, 대다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함
 - * 포브스는 '21년 35건, '22년 50건가량의 암호자산 법안 발의가 이뤄졌고, '21년에는 ▲암호화폐 규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적용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등에, '22년에는 ▲암호화폐 과세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 증권 암호화 규제 ▲블록체인 기술지원 ▲적대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제재 등이 주를 이뤘다고 분석
-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갠슬러 위원장은 '22년 11월 FTX 파산 이후 증권 규제기관인 SEC 권한을 이용해 암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자산 기업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함
- 미 암호자산 업계는 갠슬러 위원장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다고 비난하며, 산업 혁신을 방해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비즈니스를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
- 암호자산 단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CEO는 미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용단폭격으로 암호화폐 활동 근간으로서 미국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
- 하지만, 일각에서는 갠슬러 방식이 시장을 악용하는 악의적 행위자를 걸러내고, 시장에 만연한 위험을 줄여 암호자산 산업의 합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는 등 평가가 엇갈림
- 타임스지는 갠슬러의 최근 행보가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미국 암호자산 시장의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SEC의 암호자산 규제, 암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논란에 매몰...기업과 투자자 부담 증가 지적**

- SEC 규제 논란에는 암호자산이 증권(security)인지, 상품(commodities)인지에 대한 논쟁이 자리하고 있고, 증권은 SEC가,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하며, 통상 증권은 상품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 그동안 FTX의 샘 뱅크맨 프리드(Sam Bankman-Fried) 등 대다수 암호자산 리더들은 암호화폐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CFTC가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옴

- 갠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제품을 증권으로 간주해, '23년 1월부터 SEC에 금융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제미니(Gemini), 제네시스(Genesis),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
- 세 회사가 각각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투자자가 예치한 돈에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이들 상품은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
- 갠슬러는 관련 규제를 암호자산 전 분야로 확대해, 대출(Lend), 수익(Earn), 연간 수익률(APY)*, 수익률(Yield) 등 명칭과 상관없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모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
* Annual percentage yield
- SEC가 암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한 규제 적용은 암호자산 기업과 투자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제네시스는 FTX 폭락 이후 파산했지만, 제미니 투자자에게 9억 달러를 빚을 지고 있으며, 제미니 공동 설립자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는 SEC 조치가 사용자들이 돈을 돌려받는데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조작된 채류비용(주차 딱지)'이라고 비난
- SEC가 암호자산의 수익률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삼은 규제 적용은 이러한 상품이 등장한 지 1년 만에 나온 조치로, 이러한 상품을 처음 출시한 테라 폼랩스(Terraform Labs)와 창업자를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함

▶ 연준, FDIC, OCC 등 규제기관과 州 정부 등으로 확산...암호자산 넘어 메타버스 등 유관 분야까지 위축

- SEC가 암호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도하는 동안, 다른 규제기관들도 규제 강화에 나섬
-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은 2월 말 은행에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백악관도 2월 초 암호화폐 위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
- 연방 정부뿐 아니라 각 주도 규제 강화에 동참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세계 3위의 스테이블코인 팩소스(Paxos)에 새로운 암호화 토큰 발행 중단을 명령
-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채굴자부터 거래소, 대출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암호자산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이미 많은 탈중앙화 금융(DeFi) 기업들이 글로벌 서비스 제공에서 미국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
- 블록체인협회는 규제 여파가 스테이킹 제공자, 거래소, 중앙집중식 서비스 제공자, 벤처캐피털 등 생태계 전 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출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어 거의 모든 공급업체가 강제조치를 당했거나 운영을 포기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주장
- 최근 7,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메타버스 펀드를 관리하는 에브리렘(Everyrealm)도 SEC 규제 여파로 펀드를 폐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SEC 규제 여파가 유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 에브리렘은 지난 2월 샌드박스(SandBox)나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등 블록체인 기반 가상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투자 중단을 결정했고, 이는 SEC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

- 에브리렘은 블록체인 기반 투자는 계속 진행 중이며, 최근 SEC 규제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고 실행 가능성이 개선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

▶ SEC vs 암호자산, 법정 다툼으로 확대 전망...기존 리플 등 소송에 이어 새로운 소송 제기 가능성 고조

- 블록체인협회는 SEC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미 리플, 그레이스케일 등이 SEC와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송 제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암호자산 업계는 갠슬러 위원장이 규제 조치 발표 전에 소셜미디어 등에서 미리 결과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규제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따져볼 방침
- 이와 별개로 그레이스케일은 '22년 6월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수차례 지연 끝에 거부하자, 유사한 위험을 가진 다른 상품과 다르게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SEC를 제소
- SEC는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와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과 규제가 적용되는 거래소 간 감시 공유 계약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레이스케일 ETF 신청을 거부함
- 법원은 세부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고, 암호자산 업계는 세부 사항을 살필수록 그레이스케일 주장이 힘을 얻는다고 평가
- SEC와 그레이스케일 모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SEC와 암호자산 업계의 법정 다툼은 더욱 가열될 전망

▶ 암호자산의 탈미국 움직임, 암호화폐 허브 경쟁 촉발...영국, 홍콩, UAE 등을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

- 암호자산 기업의 탈미국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서 암호화폐 허브 자리를 둘러싼 국가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는 분석
- 미국을 떠난 기업들은 영국, 홍콩,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들 국가는 암호자산 관련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제시하며 암호자산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 암호자산 기업 연합체인 암호화폐협의회(CCI)* 실라 워렌(Sheila Warren) CEO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정 도입 대신 처벌을 선호하고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없어 기업이 하나둘 떠나고 있으며, 새로운 웹 3 기업들은 미국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지적
*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 **(홍콩)** 지난 1월 친 암호화 정책 채택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 유치에 집중해 암호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폴 찬(Paul Chan) 재무부 장관은 홍콩은 암호자산의 무임승차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국제 규범 및 표준을 따르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춰 디지털자산 기업의 품질 기준점이 됐다고 강조
- 홍콩의 친 암호화폐 움직임에 따라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와 글로벌 대형 거래소 후오비 등이 홍콩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기업 이동이 구체화하고 있음

- 세바스찬 파레데스(Sebastian Paredes) DBS CEO는 홍콩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고, 후오비 창업자 저스틴 선도 홍콩 진출 계획을 발표하고, 홍콩을 중국 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실험 지역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언급
- **(영국)**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 초 암호자산 규제 계획안을 공개하고 업계에 피드백을 요청하는 등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착수
- 재무부는 암호자산 규제는 암호화 산업의 잠재적·경제적 이익을 억누르지 않는 방식의 소비자 보호에서 시작될 것이며, 암호화 기술 이점을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험을 완화하는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
- 영국의 암호자산 규제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HM 재무부 제안이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협력 의사를 표명
-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쿠퍼(Cooper)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영국이 암호화폐 허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허브를 지향하는 공감대가 형성됨
- 해먼드 전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핀테크 등 금융 경쟁력이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EU와 스위스 등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
- **(두바이)** 암호자산 전담 규제 기구 VARA(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는 '23년 2월 두바이의 지역 및 국제 암호화 허브로 도약 목표를 담은 가상자산 규정집을 발표
- 두바이 규정은 ▲가상자산 및 관련 활동 규정 ▲회사 규정 ▲규정 준수 및 위험 관리 규정 ▲기술 및 정보 규정 ▲시장 행동 규정 등 강제 규정과 라이선스 규정, 자문·수탁·대출 등 서비스 규정으로 구성됨
- VARA는 두바이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규정 준수, 위험 관리, 시장 행위 및 기타 요구 사항 지침 등 4대 필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50만 AED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
- 아부다비의 글로벌 기술 생태계인 '허브 71'은 지난달 웹 3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웹 3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UAE에 다양한 혁신기업 유치로 목표를 약 20억 달러 규모로 운영된다고 공개

- 미국이 SEC, 연준, FDIC, OCC 등 금융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를 크게 강화해 암호자산 생태계를 넘어 메타버스 등 유관 산업 환경까지 악화되어 혁신기업의 탈미국이 본격화된다는 지적
- 이 때문에 암호자산 허브를 노리는 국가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영국, 홍콩, UAE 등이 새 거점으로 주목받아 암호화 미래에서 아시아 비중이 커졌다는 분석

[출처]

- Time, 'The U.S. Crypto Crackdown Could Reshape the Industry', 2023.3.02.
- Forbes, 'Congress Has Introduced 50 Digital Asset Bills Impacting Regulation, Blockchain, And CBDC Policy', 2022.5.19.
- Forbes, 'In 2021, Congress Has Introduced 35 Bills Focused On U.S. Crypto Policy', 2021.12.27.
- Coindesk, 'The Future of Crypto Markets Will Be Driven by Developments in the East', 2023.3.0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BIS, 글로벌 은행 20%가 암호자산 취급...전체 위험 비중에서 1% 미만

- 은행의 암호자산 위험 수준, 다른 위험보다 한참 낮은 수준 평가... 암호자산 수탁액은 전체 0.005% 수준
- 암호

국제결제은행(BIS)이 글로벌 은행의 20%가 암호자산을 취급하며, 이들 은행의 암호자산의 잠재적 위험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은행의 전체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고 평가

▶ BIS, 은행의 암호자산 위험 수위를 다른 위험보다 한참 낮은 수준 평가... 암호자산 수탁액은 0.005% 수준

- BIS가 바젤 Ⅲ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22년 상반기 은행의 바젤Ⅲ 자본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고, 유동성 비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했다고 분석
- * Basel III Monitoring Report :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Ⅲ 프레임워크의 영향력을 티어1 은행과 티어2 은행으로 구분해 분석한 보고서로 티어1 은행은 기본 자금이 30억 유로 이상인 글로벌 은행이 포함되며, 그 외 은행은 티어2로 분류
-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티어1 은행의 20%가량인 17개 은행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며, 이들의 건전성 암호자산 익스포저*는 29억 유로, 암호자산 수탁액은 1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Prudential exposures: 은행의 신용·시장위험 가중자산에 영향을 주는 합성 및 파생 자산 등을 포함한 암호자산 취급량으로, 직접 소유한 암호화폐, 암호화폐 기업 주식, 암호자산 거래 및 파생상품 청산 등이 포함됨
- BIS는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17개 글로벌 은행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11개 은행이 미주에, 4개 은행이 유럽에, 2개 은행은 기타지역에 위치하며, 암호자산 보유액은 전체 보유자산의 극히 일부라고 평가
- 은행 표본의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7개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는 총 익스포저의 0.013%에 불과하고, 암호자산 수탁액은 전체의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티어1 전체 은행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암호자산 익스포저는 전체 익스포저의 0.003%, 암호자산 수탁액은 전체의 0.0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올 상반기에 잠재적 암호자산 익스포저가 30% 증가했고, 수탁은 66% 감소했으며, 이는 암호자산의 시장 가치 하락과 은행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축소한 여파로 파악
-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특정 은행이 전체 암호자산 익스포저의 61.7%를 차지했고, 기타 4개 은행이 35%를 차지해 극심한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BIS는 '22년 12월 은행 간 암호화폐 준비금을 2% 한도로 제한하는 표준을 승인하고,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당시 BIS는 글로벌 은행의 암호자산 관련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라고 도입 배경을 강조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현 암호자산의 위험 수준이 표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22년 12월 대부분 경우에 은행은 암호자산 수탁을 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

▶ 글로벌 은행, 은행 수 감소 불구하고 위험자산 소폭 증가...중소은행, 은행 수와 위험자산 모두 대폭 감소

- 바젤Ⅲ 프레임워크가 은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티어1 은행의 자본 비율은 12.7%로 하락했고, 최소 요구자본(MRC)*은 '21년 12월 2.6%와 비교해 약간 상승한 2.8%로 나타남

* minimum required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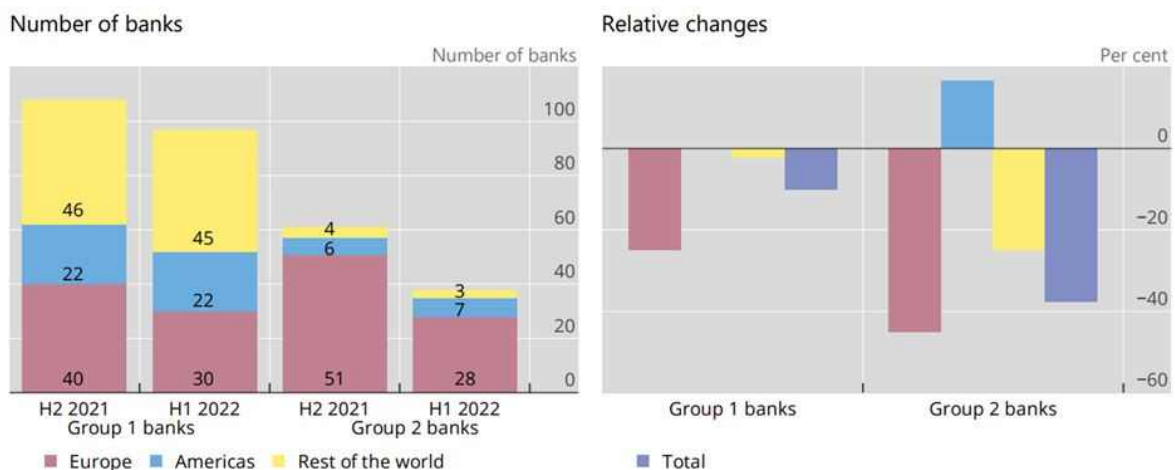
- 티어1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현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감소했고, 미주 및 기타지역보다 유럽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티어1 은행 MRC는 바젤Ⅲ 표준의 단계적 도입 영향으로 2.8%로 증가했고,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임

- 미주 지역은 1.9% 소폭 증가, 유럽은 15.9%로 급증, 그 외 지역에서는 -3.9%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 한편, 티어1과 티어2 은행 간 반대 현상이 나타나, 티어1 은행 수는 10% 감소하고 위험가중자산(RWA)*은 소폭 증가했지만, 티어2 은행 수는 40% 감소하고 RWA도 44% 감소함

* Risk Weighted Assets :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의 단순 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저에 해당 익스포저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

['21년 12월~'22년 6월 은행 수 변동]



출처 : BI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티어1 은행의 표본 분포]

구분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은행 수		총 RWA		은행 수		총 RWA	
유럽	40	37%	8,575	24%	30	31%	8,053	22%
아메리카	22	20%	8,793	25%	22	23%	9,852	27%
기타	46	43%	17,715	50%	45	46%	18,544	51%
총계	108	100%	35,083	100%	97	100%	36,449	100%

출처 :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 BIS는 티어1 은행의 RWA 증가는 주로 포트폴리오 변경 때문으로 진단했고, 티어2 은행 RWA 감소는 유럽 은행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유럽 당국의 표준 채택을 통한 관련 은행 확대가 주요인이라고 구분
- 티어1 은행은 '21년 기준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22년 들어 유럽 은행이 대폭 감소해 미주 등 다른 지역의 비중이 높아졌고, 은행 분포가 RWA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반면, 티어2 은행은 유럽이 강력하게 지배해 '21년 기준 유럽 비중이 84%에 달하고, '22년 들어 유럽권 은행 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74%를 점유해 전체 RWA 상승을 이끌고 있음*
- * 유럽 은행은 '21년 하반기에 RWA의 92%를 차지했고, '22년 상반기에도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티어2 은행의 표본 분포]

구분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은행 수		총 RWA		은행 수		총 RWA	
유럽	81	84%	1,256	92%	28	74%	659	87%
아메리카	6	10%	47	3%	7	18%	63	8%
기타	4	7%	61	4%	3	8%	38	5%
총계	61	100%	1,364	100%	38	100%	760	100%

출처 : Basel III Monitoring Report

▶ 암호자산 위험, 70%가량이 청산과 거래 활동에서 발생...이외에 은행 보유자산 및 기업 대출원인

- BIS는 글로벌 차원에서 평균 MRC 변화는 티어1 은행보다 티어2 은행이 더 높다고 진단하고, 이는 티어2 그룹이 바젤Ⅲ 프레임워크의 더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
- BIS는 은행의 건전성 익스포저 대부분은 청산과 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며, 이는 전체 암호자산 건전성 익스포저의 41%와 32%를 차지한다고 분석
- 또한 익스포저의 10%는 은행 보유자산에서 발생하며, 나머지는 암호자산의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한다고 설명
- 암호자산 건전성 익스포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총 43%를 차지하며,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주식과 부채가 29%, 이더리움은 4%의 비중을 차지함
- BIS는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은 RWA 기준 21%, 전체 레버리지 비율 익스포저 측정치(LREM) 기준 24%를 기록해 바젤Ⅲ 모니터링 대상인 181개 은행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

- BIS가 바젤Ⅲ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은행의 암호자산 위험 수위는 여타 위험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하고, 은행 전체의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 미만으로 평가
- BIS는 글로벌 은행 가운데 20%가량인 17개 은행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 위험 가중자산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

[출처]

- Cryptoslate, 'Banks' direct exposure to crypto less than 1% of total – BIS report', 2023.03.02.
- Cointelegraph, 'Crypto distribution is uneven among banks as prudential exposure rises: BIS report' 2023.03.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상·하원 의원, SEC 'SAB 121' 지침 비난..소비자 보호 외면 지적

- SAB 121, 디지털자산 취급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에 고객자산 내용 표기...추가 자본 확보를 요구
- 바젤, 디지털자산 수탁에 추가 자본 적립 불필요 확정 발표...바젤 표준 따르는 기관에 혼선 초래

미 상원과 하원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발표한 회계 지침(SAB 121)*이 법적 불분명성으로 인해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요 금융기관에 관련 답변을 요구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Staff Accounting Bulletin 121

▶ SAB 121, 디지털자산 취급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에 고객자산 내용 표기...추가 자본 확보를 요구

- 하원 금융서비스 패트릭 맥 헨리 위원장과 상원 은행위원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SEC가 '22년 3월 발표한 지침이 수탁업체의 위험성을 부풀려 고객의 안전한 디지털자산 보관을 방해한다고 지적
- 두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담긴 서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국립신용조합협회(NCUA) 등 미 금융 규제기관에 보내 3월 16일까지 답변을 요청함
- 그동안 수탁업체에 보관된 자산은 고객 소유로 간주해 수탁업체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SEC는 SAB 121에서 디지털자산을 수탁업체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로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함
- SAB 121로 디지털자산 취급 금융기관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졌고,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가 금융기관의 기피 대상이 되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디지털자산 소유 미국인의 이용이 제한됐다고 주장
- 또한, SEC가 지침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통화, 스테이블코인, 토크화된 주식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상품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규정 준수에 대한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
- SEC 지침에 따르면 수탁 등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은행은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해 연말 바젤위원회는 대부분 경우 디지털자산 수탁을 위해 자본을 따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확정 발표함
- 미국 각 관할이 바젤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견해 차이는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지적
- 이런 상황에서 두 의원은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침 발표 전 협의 여부 ▲전통적 처리 근거 ▲해당 지침 적용 및 지시 여부 ▲바젤 지침과 충돌 여부 ▲지침 결함 지적에 대한 의견 등에 답변을 요구

- 2인의 상·하원 의원이 SEC가 디지털자산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SAB 121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을 규제 당국의 보호에서 배제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 입장을 요구
- 두 의원은 SEC 지침이 모호한 정의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며, 바젤위원회 건전성 지침과 불일치해 바젤을 따르는 미국 각 관할권 금융 규제를 혼탁하게 한다고 비난

[출처]

- Ledger Insight, 'US lawmakers question SEC crypto custody accounting rule', 2023.3.0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호주]

호주중앙은행, CBDC 파일럿 착수 발표...6월 결과 발표 예정

- 오프라인 결제, 자산거래, 슈퍼스트림 결제, 세금 납부 등 14개 사례 공개...가축 경매 등 이색 사례 관심
- 캔버스 디지털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영지식 롤업 환경, USDC 스테이블코인과 eAUD 이용

호주중앙은행(RBA)이 3월 중에 민간과 공동으로 디지털 호주 달러(eAUD) 프로젝트 착수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CBDC 수탁, 자산 거래, 가축 경매 등 총 14개 부분의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

▶ 오프라인 결제, 자산 거래, 슈퍼스트림 결제, 세금 납부 등 14개 사례 공개...가축 경매 등 이색 사례 관심

- RBA는 호주 디지털 금융 협력연구센터(DFRC)와 공동으로 CBDC의 잠재적 사용 사례와 경제적 이점을 탐구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3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 RBA 브랜드 존스 부총재는 금융 관련 소규모 핀테크 기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폭넓은 민간 참여로 14개 부문에 걸쳐 병렬로 추진되며 6월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언급
- RBA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추진할 사례를 다양한 산업에서 공모를 통해 제안받았고, CBDC 통찰력 및 구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1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설명
- 이번에 추진되는 사례는 ▲오프라인 결제 ▲자연 기반 자산 거래 ▲슈퍼스트림 결제 ▲회사채 결제 ▲토큰화된 FX 결제 ▲세금 납부 자동화 ▲CBDC 수탁 모델 등이 포함됨
- 이외에도 가축 경매(Livestock Auction), 고품질 유동자산 증권거래, 웹 3 상거래용 상호운용 CBDC, 자금 수탁, 건설 결제, 토큰화 지폐, CBDC 배포 등을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
- 파일럿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캔버스 디지털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영지식 롤업 환경이 제공되며, 서클의 USDC 스테이블코인과 eAUD를 사용해 거래를 지원함
- RBA는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종의 추상적인 샌드박스에서 진행되는 연습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해 미국 등 여타 파일럿 프로젝트와 차별화를 강조
- 한편, 최근 일본이 4월부터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를 발표했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은 현재 10개국 이상이 CBDC를 출시했고, 89개국이 CBDC 파일럿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호주중앙은행이 3월 중에 디지털 호주 달러(eAUD)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해 오프라인 결제, 자산 거래, 세금 납부 자동화, 가축 경매 등 14개 부문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
- 호주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강조하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영지식 롤업 환경에서 실제 디지털 청구를 다양하게 실험할 방침이라고 강조

[출처]

- Decrypt, 'Australia Announces CBDC Pilot and Study for the eAUD', 2023.3.0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규정 도입 추진...연방법 지체로 자체 도입 박차

- 양원, 뉴욕주 등 벤치마킹해 새 규정 개발...암호화폐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목표
- 암호화폐 기업에 라이선스 제도 및 신탁회사 설립 요구, 거래소에는 공시, 자산 보호, 해킹 대응 등 주문

미 일리노이주가 연방 정부의 암호자산 규정 도입이 지연되자, 주 차원에서 암호화 기업 라이선스 제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

▶ **일리노이주 양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해 5월 통과 추진...자체 규정 보유로 규제 공백 최소화 목표**

- 일리노이주 데이비드 드칼로(David DeCarlo) 규제 혁신 책임자가 주 차원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일리노이주 양원에 암호화폐 규정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공개
- 새 법안은 일리노이주 금융 및 전문 규제부(IDFPR) 지원을 받아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보유한 주의 사례를 참고해 개발했다고 설명
- 일리노이 규정은 암호화폐 기업에 뉴욕주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와 유사한 라이선스 취득과 고객자산 보관을 위한 신탁회사 설립 의무를 부여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타 가상자산 기업은 투자 공시, 고객자산 보호, 해킹 등 사이버 방어 구축,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함
-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가장 적대적으로 평가되는 비트 라이선스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가 제기
- 일리노이주는 다른 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현재는 뉴욕주가 유일)한 기업은 라이선스 대기 기간 중에 영업을 허용한다고 강조하고, 새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 요건 준수를 위한 유예 기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
- 법안을 발의한 양원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나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선의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고객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
- 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 규정이 없어 일리노이주 등 대다수 주가 송금업자 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업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 민주당이 다수당인 일리노이주 의회는 5월 회기 종료일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

- 일리노이주가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및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이 담긴 암호화폐 규제 도입을 추진해 양원에 법안을 발의했고, 5월 회기에서 통과시킬 방침으로 알려짐
- 일리노이주는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자체 규정을 개발했고, 연방 규정 도입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주가 발 빠르게 나선다는 평가를 받음

[출처]

- Coindesk, 'Illinois Officials Pushing State Crypto Licensing to Emulate New York's BitLicense', 2023.02.28.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각국 결제기업, 3년 내 '블록체인 결제' 확산 전망..비용 절감이 동인
2. 블록체인 선도국...엘살바도르, 포르투갈, 싱가포르, 몰타, UAE 주목
3. 親 암호화 은행 SVB·시그니처 파산..암호화폐 생태계·유동성 타격
4. 獨 금융감독청, 'NFT 증권 분류는 불가능'..허가 요건은 사안별 결정
5. 親 암호화 은행 실버게이트, 청산..암호자산 인프라 손상이란 평가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각국 결제기업, 3년 내 '블록체인 결제' 확산 전망...비용 절감이 동인

- 결제기업 50%, 대다수 판매자가 3년 내 암호화폐 결제 수용 예측...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 선도 전망
- 송금과 국경 간 B2B 결제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 전망...미국, 3년 새 350% 성장해 550만 사용자 확보

리플과 신속결제협의회(FPC)*가 45개국 300여 개 결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기업 97%가 3년 이내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진단하고, 규제의 모호성이 블록체인 결제 채택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답변

* Faster Payments Council : 모든 개인과 조직에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 결제기업 50%, 대다수 판매자가 3년 내 암호화폐 결제 수용 예측...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 선도 전망

- 리플과 FPC는 암호화 결제 산업에 대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글로벌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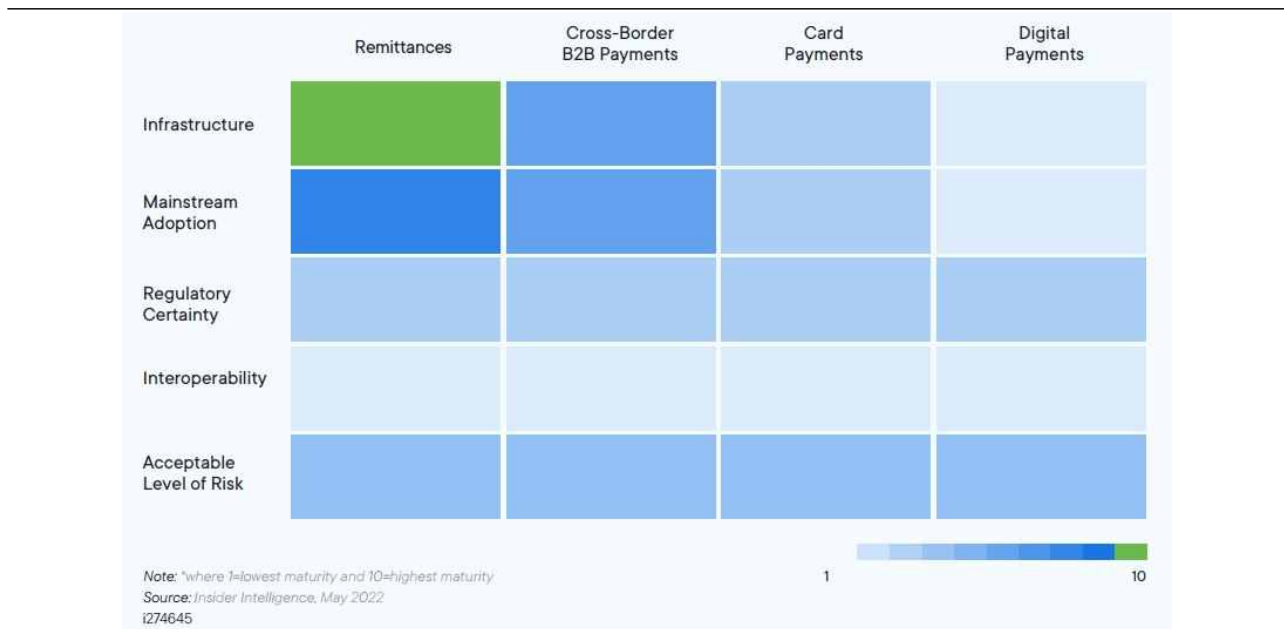
* Transforming the Way Money Moves, 2023.3

- '돈이 움직이는 방식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45개국 분석가 및 결제기업 CEO 281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결제사용 사례, 디지털자산 사용 장벽 등 25개 항목에 걸친 답변을 분석
- 대다수 결제기업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결제 속도 개선과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진단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두 부문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 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향후 3년 이내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빠른 결제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제기업 임원 50% 이상이 다수 판매자가 1~3년 내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할 것으로 예측
-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24년까지 대다수 판매자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다른 지역보다 빠른 확산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모바일 결제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지원 솔루션 등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가 크게 촉진될 것이란 분석
- 보고서는 결제기업 임원 52%가 결제에서 암호화폐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도구 및 솔루션 부족으로 실제 암호화폐를 도입한 비중은 17%('22년 상반기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 결제기업들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의 광범위한 수용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을 규제의 명확성 부족이라고 진단함
- 관련 업계는 올해 초부터 주요 기업의 블록체인 채택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리플 보고서가 암호화 관련 기술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
- * 블록체인 분석기업 캐스퍼 랩스(CasperLabs)가 '23년 1월 마·영·중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했고, 내년부터 투자를 늘릴 방침이라고 답함

▶ (결제시장 암호화 현황) 송금과 국경 간 B2B 거래 중심으로 성장...미, 3년 만에 550만 사용자 확보

- 전 세계에서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조 달러가 이동하고 있지만, 아직 암호화폐 결제 거래량은 전체 결제 규모에서 적은 편이지만 장기적 성장 전망을 밝다고 전망*
- * 암호화폐 결제는 공급자와 고객에게 프로세스 복잡성 감소, 비용 절감, 투명성 강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결제시장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
- 하지만, 미국 결제시장에서 암호화폐 결제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23년에는 암호화폐 결제 사용자가 550만 명에 달해 3년 만에 350%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23년 미국의 암호화폐 결제사태 성숙도]



출처 : Ripple, 'Transforming the Way Money Moves',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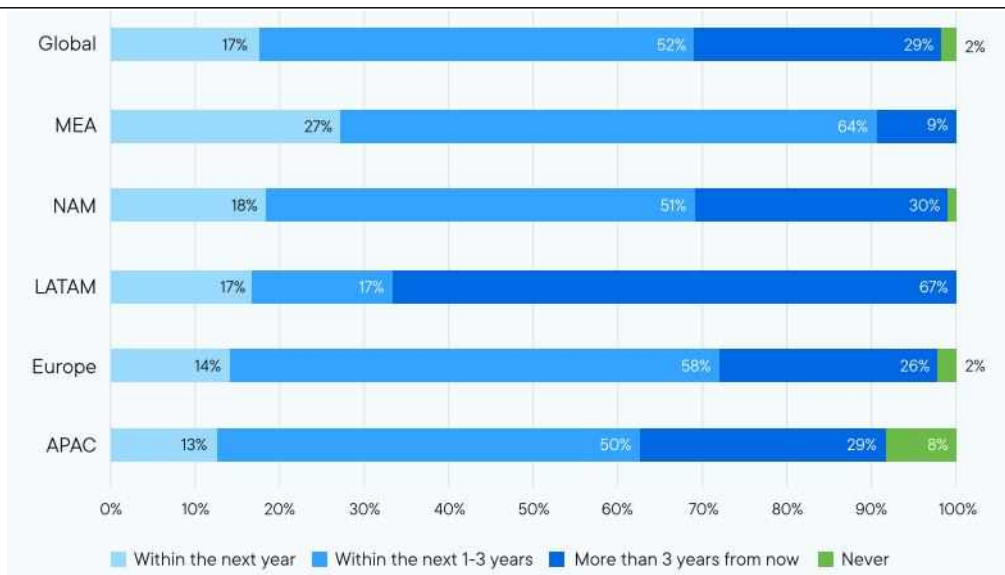
- 보고서는 암호화폐 결제가 ▲송금(Remittances) ▲국경 간 B2B 결제 ▲카드 결제 ▲디지털 결제 등 4개 영역에서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송금이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국경 간 B2B 결제가 뒤를 이을 전망
- 미국의 암호화폐 결제사태 평가에서 송금 인프라의 경우 현재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했고, 주류 채택(Mainstream Adoption)이 시작될 시점으로 평가됨
- 반면 디지털 결제 관련 인프라와 주류 채택, 각 암호화폐 결제사태의 상호운용성은 초기 단계로 평가되어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남
- 위험 관리(Acceptable Level of Risk) 역시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제 명확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에서는 주요 결제 인프라 기업들이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의 상호운용성 지원에 나서고 있어 결제 혁신이 크게 촉진될 전망
- 지난해 페이팔(Paypal)은 사용자의 비트코인 및 주요 암호화폐 결제 허용을 발표했고, 스트라이프(Stripe)는 스테이블코인을 비즈니스 결제 솔루션과 통합함

- 이외에 연간 19억 건의 결제*가 처리되는 보험금 청구, 보상금, 리베이트 등의 영역에서 암호화폐 결제 활용이 시험 중이라고 강조
- * 이 중 1/3이 종이 수표로 거래가 이뤄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

▶ 암호화 결제, 각종 구매·판매·대출 등 적용...자동차·부동산 등 소유권 관리 필수 산업에서 시범 적용

- 설문조사 응답자 97%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향후 3년 이내에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 응답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국경 간 결제* 혁신에서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
 - * EY는 전 세계 국경 간 결제가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보여 '22년 156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
 - * 주니퍼 리서치는 블록체인을 통해 '30년까지 약 100억 달러의 국경 간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측
- 응답자 50% 이상이 다양한 암호화폐 결제사례 등장을 예상했고, 1~3년 이내에 대다수 판매자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는 다양한 구매·판매·대출 등에 적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자동차 소유권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해 차량 대출 프로세스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아직 초기 단계지만, 부동산 산업에서도 블록체인 결제 도입이 증가해 NFT로 판매되는 주택 수가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인수, 감정, 소유권 검색, 증서 작성 등의 프로세스 효율화가 추진됨
- 권역별로 중동 및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결제 수용이 가장 빠르고,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권역별 블록체인 결제 도입 전망]



출처 : Ripple, 'Transforming the Way Money Moves',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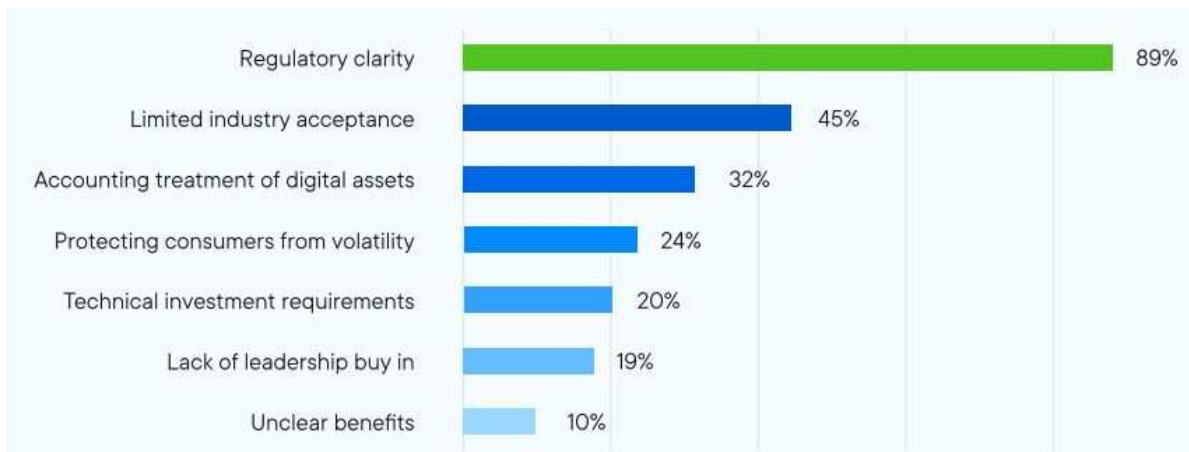
▶ 암호화 결제,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사용 의사 높지만, 규제 모호성 등으로 17% 도입에 그침

- 설문조사 응답자 50% 이상이 암호화 결제 최대 장점으로 비용 절감에 주목하며, 국제 결제 비용 절감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 리플은 다른 연구 결과(New Value Research, August 2021)를 제시해 거래비용뿐 아니라 금융 및 일반 기업의 비즈니스 및 고객 응대 비용을 각각 30%, 40% 줄일 수 있다고 강조
- 암호화 결제 도입을 고려한다는 답변이 52%로 나타났지만, 업무에 실제 도입한 비중은 17%로 나타나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암호화 결제 도입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규제 모호함을 꼽은 비중이 89%로 가장 높았고, 업계의 제한된 수용(45%), 디지털자산 회계처리(32%), 고객의 변동성 보호(24%) 등이 뒤를 이음

[암호화 결제 도입 걸림돌]



출처 : Ripple, 'Transforming the Way Money Moves', 2023.3

- 결제기업 임원들은 블록체인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 응답자의 98%가 블록체인 사용의 환경적 영향을 인정했고, 71%는 낮은 에너지 소비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
- 리플은 또 다른 보고서를 인용해 금융기관의 50% 이상이 블록체인 사용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75%의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암호화폐 구매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강조
- 보고서는 결론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지원하는 기업은 현재 일부지만, 더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결제를 채택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조만간 광범위한 채택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 이는 배타적인 현 결제시장의 혁신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암호화폐가 미래 지향적인 결제시장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40개국 결제기업 임원들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더 빠르고 저렴한 장점을 살려 1~3년 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다수 판매자도 이를 빠르게 수용할 것으로 예측
- 아직까지 전체 결제시장에서 암호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송금과 국경 간 B2B 결제를 통해 빠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 규제의 모호성이 대중적 도입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나타남

[출처]

- Cointelegraph, 'Ripple survey: 97% of payment firms believe in the power of crypto' 2023.3.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국...엘살바도로, 포르투갈, 싱가포르, 몰타, UAE 주목

- 엘살바도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첫 인정...우려와 달리 관광산업 성장과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
- 포르투갈, 암호화폐 면세와 공공·의료·공급망에 블록체인 적극 활용...과세 방침 공개로 대대적 변화 전망

엘살바도로, 포르투갈, 싱가포르, 몰타, UAE 등 5개국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블록체인 활용을 주목해 규제 정비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유치에 나섰고, 산업의 생산성·보안·투명성 향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투자 중심지'라는 브랜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엘살바도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우려와 달리 관광산업 성장과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

-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최초 국가가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했고, 비트코인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이 95% 성장했고, 국가 이미지를 리브랜딩하는 효과를 거둠
- '21년 6월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와 함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
- 당시 엘살바도르 정부는 성인 70%가 은행 계좌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고, 금융 포용성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비트코인의 광범위한 채택 촉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섬
- '21년 8월 엘살바도르 의회는 국영 개발은행 엘살바도르개발은행(Banco de Desarrollo de El Salvador)의 1억 5,000만 달러 신탁기금을 승인해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자동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두 통화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21년 9월 당국은 치보(Chivo)* 월렛을 출시하고, 엘살바도르와 미국 50개 도시에 암호화폐 현금자동 입출금기(ATM)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국내 송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
* '멋지다'는 의미의 속어
- '22년 암호화폐 시장 혼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국제 금융기구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를 진행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투자를 늘림
- 엘살바도로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하루 평균 1BTC의 달러 구매를 공개 발표함
- '23년 1월 엘살바도르는 디지털자산 발행법(Digital Asset Issuance Law)을 도입해 비트코인이 뒷받침하는 채권 발행을 허용
- 이에 따라 '21년부터 추진되어 온 화산이 많은 엘살바도로의 화산열 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를 담보로 한 화산 채권(Volcano Bond) 발행이 추진됨
- 블룸버그는 엘살바도르 경제를 파탄 낼 것으로 우려를 샀던 부켈레 대통령이 유례없는 범죄 감소와 송금

및 관광 수입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엘살바도로 대통령이 월스트리트를 이겼다'고 평가

▶ (포르투갈) 암호화폐 면세와 공공·의료·공급망에 블록체인 적극 활용..과세 방침 공개로 대대적 변화 전망

- 포르투갈은 공공 서비스, 의료, 공급망 관리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섬
- '19년 포르투갈 정부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참여자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블록체인 파노라마 플랫폼(Blockchain Panorama platform)을 도입
- 또한, 암호화폐로 청구서 및 세금을 내는 등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환경을 구현하고, 친 암호화폐 정책에 힘입어 암호화폐 애호가와 기업들이 포르투갈로 몰려들
- 비트베이스(BitBase) 등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등장해 주요 도시에 비트코인 ATM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상점도 크게 증가함
- '21년 포르투갈 정부는 기술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자유구역(ZLT) 조성을 위한 법령을 도입했고,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험 및 테스트 등의 기술 지원이 포함됨
-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구매·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암호화폐 기업들에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방코 베스트(Banco Best), 방코 아틀란티코 유로파(Banco Atlântico Europa) 등 암호화폐 친화 은행도 다수 등장함
- 하지만 '22년 하반기 포르투갈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호화폐 수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온 기존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됨

▶ (싱가포르) 통화청 주도로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추진, '22년 침체기에 보수적 규제로 회귀 평가

-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블록체인 연구개발과 친 암호화폐 규제 환경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초기 코인공개 (IPO)에서 가장 인기 높은 지역으로 꼽힘
- 싱가포르 금융 규제기관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 기술 표준, 인프라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MAS는 자기들의 주요 역할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제시
- '21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Independent Reserve)가 싱가포르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 시민 43%가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암호화폐가 폭넓게 확산됨
- '22년 동일한 조사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시민의 관심, 신뢰, 확신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조사 대상자 58%가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이자 가치 저장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2년 테라폼스 랩스(Terraform Labs)와 쓰리애로우 캐피탈(Three Arrows Capital) 등이 모두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다 파산해 싱가포르에 큰 타격을 줌

- 이후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가 더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평가 속에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제기됨

▶ (몰타) '17년부터 블록체인 도입을 장려해 규제 정비 완료...블록체인 섬으로 불리며 적극적 기업 유치 추진

- 몰타는 '17년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일부 산업 규정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 장려에 나서 블록체인 섬이란 명성을 얻음
- '18년 몰타 의회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ICO, 디지털자산, 디지털통화 규제 ▲관련 서비스 규제 등 3개 법안을 통과시킴
- 몰타는 암호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자화폐와 유틸리티 토큰은 자본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고, 증권과 가상 금융자산은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함
- '21년 몰타 정부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플랫폼을 출시했고, 상업 가이드를 발표해 몰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운영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섬
- 현재 몰타는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국제 감시가 심해지면서 빈번한 국제 조사 등으로 인해 블록체인 정책이 이전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그런데도, 몰타 현지에서는 와인이나 올리브 오일 등의 제품 공급망이 블록체인으로 작동하는 등 저변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음

▶ (UAE) 블록체인을 메타버스, NFT와 함께 집중 육성...두바이, 아부다비 중심으로 암호화 허브 도약 추진

- '18년 4월 UAE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부 서비스 및 민간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UAE 블록체인 전략 2021'을 발표
- UAE는 디지털 혁신 주요 거점으로 명성을 보유했고 블록체인을 메타버스와 NFT와 함께 혁신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 주력
- 두바이, 아부다비 외에 UAE를 구성하는 나머지 토후국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규정을 시행*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적용됨
- * '23년 2월 라스알카йма(RAK) 토후국은 가상자산과 디지털기업만을 위한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인 'RAK 디지털 자산 오아시스(RAK DAO) 설립을 발표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엘살바도르, 포르투갈, UAE, 몰타, 싱가포르 등이 블록체인 규제 정비를 통한 親 산업 환경을 구현한 블록체인 도입 선도국으로 꼽힘
- 이들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투자 거점이라는 국가 브랜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엘살바도르는 국제 금융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송금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두드러진 경제 성장 효과를 거둠

[출처]

- Cointelegraph, '5 countries leading the blockchain adoption', 2023.03.09.
- Bloomberg, 'How El Salvador's Bitcoin-Loving President Won Over Wall Street', 2023.2.1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親 암호화 은행 SVB·시그니처 파산...암호화폐 생태계·유동성 타격

- SVB, 암호화폐 스타트업 지원에 핵심 역할 수행...자본 유치·매각 추진 중에뱅크런 발생으로 파산
- 시그니처, 암호화폐 실시간 거래 플랫폼으로 높은 영향력...SVB 파산으로 부실 징후 나타나 폐쇄 결정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이 유동성 불충분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폐쇄했고, 여파로 실시간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시그니처은행까지 파산해 암호화폐 업계가 큰 충격을 받음

* 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 SVB·시그니처 연이은 파산으로 암호화폐 유동성 손상...연준, 예금보호 발표로 파산 여파 확산 저지

- SVB는 2,090억 달러 자산과 1,754억 달러 예금 보유('22.12.31 기준)로 20대 은행에 속한 대형 은행으로, '08년 금융위기에 파산한 워싱턴뮤추얼(3,070억 달러 자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으로 기록됨
- '82년 설립된 SVB는 기업공개 이후 성장세 둔화에 처한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기술 및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옴
- SVB는 최대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인 안드리센 호로위츠, 세퀘이아 등과도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알려짐
- SVB는 파산 직전 자산 매각으로 18억 달러 손실을 본 후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본조달을 추진했지만 실패해 기업 매각을 추진했지만, 곧바로 터진 뱅크런(3.9일 하루에 420억 달러 유출)으로 결국 파산
- 월가는 SVB 파산이 더 광범위한 은행 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지만, SVB 파산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암호화폐 전문은행 시그니처 은행(1104억 달러 자산)의 폐쇄 결정으로 이어짐
- 연이은 은행 파산 결정으로 연방준비은행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 예금에 대해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전액 보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발 빠른 수습에 나섬
- 암호화폐에 우호적이던 시그니처은행과 암호화폐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해 온 SVB의 파산은 암호화폐 생태계와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음
- 암호화폐 산업 지원 은행이 감소하고 있어 암호화폐 기업의 자금 유치 및 유동성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

-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던 시그니처은행과 암호화폐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해 온 SVB가 연이어 파산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와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부각됨
- 연방준비은행은 두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는 성명을 통해 파문 확산을 막았지만, 암호화폐에 가장 친화적인 은행들의 파산으로 암호화폐 기업의 자금 유치 및 유동성 문제가 더욱 심화할 전망

[출처]

- CNBC, 'Silicon Valley Bank is shut down by regulators in biggest bank failure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2023.3.1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독일]

獨 금융감독청, 'NFT 증권 분류는 불가능'..허가 요건은 사안별 결정

- 대체 불가능한 NFT 특성, 규제 관점에서 최소 단위 표준화 및 거래·호환 어려워 증권 분류 불가능 결론
- 규제 관점에 따라 다르게 구분 가능하다고 인정, 증권 및 투자 분류 시 반드시 투자설명서 필요 강조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이 NFT가 대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최소 단위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거래 및 호환이 어려워 규제 관점에서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

▶ 대체 불가능한 NFT 특성, 규제 관점에서 최소 단위 표준화 및 거래·호환 어려워 증권 분류 불가능 결론

- BaFin은 '22년 중반 이후 NFT 수요와 가격이 급락했지만, 일시적 슬럼프 때문에 NFT의 광범위한 응용력과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
- 업계는 독일 금융 규제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 금지를 주목적으로 한 초기 규제에서 진화해 이제 초기 코인 및 보안토큰 제공, 분산형 앱(dApps)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평가
- BaFin은 NFT 규제 검토에서 아직까지 NFT가 주식 및 채무 상품 등 금융 증권과 유사한 기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적 측면에서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
- 사용자가 NFT의 구매 및 판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NFT 범주에 대한 투자 목적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금융 투자를 위한 NFT의 특정 적합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
- BaFin은 NFT가 증권으로 분류되거나 투자로 분류되려면 투자설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 하지만, NFT가 예술품 소유권 증명에 사용된 경우, NFT가 발행자의 예술품 판매 의무를 구현하고, 토큰 보유자에게 상환 및 이자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어 자산투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석
-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NFT 허가 요건은 독일 은행법(KWG) 또는 독일 증권기관법*에 따라 개별 사안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발행자와 토큰의 권리 연결과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
- * Wertpapierinstitutsgesetz
- BaFin은 NFT가 규제 관점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커 금융 규제기관은 지속적인 기회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NFT 규제 검토에서 NFT의 대체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최소 단위 표준화와 이를 통한 거래 및 호환이 어려우므로 증권으로 분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
- 하지만, BaFin은 NFT가 규제 관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EU 지침 등에서 증권이나 채권으로 분류될 때는 항상 투자설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출처]

- Cryptopotato, 'NFTs Are Not Securities Yet, According to Germany's BaFin', 2023.03.0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親 암호화 은행 실버게이트 청산 결정...암호자산 인프라 손상이란 평가

- 실버게이트, '22년 4분기에 10억 달러 순손실 등 이상 징후 노출...암호화폐 기업 이탈로 어려움 가중
- 실시간 암호화폐 전송 플랫폼 등 주요 시스템 운영 중단, 암호자산 생태계 및 핵심 인프라 손상 평가

암호화폐 친화 은행 실버게이트캐피탈(Silvergate Capital)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막대한 손실 끝에 운영중단 및 자발적 청산을 결정하고, 모든 예금 상환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

▶ **실시간 암호화폐 전송 플랫폼 등 주요 시스템 운영중단, 암호자산 생태계 및 핵심 인프라 손상 평가**

- 이번 폐쇄 결정은 지난 3월 초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공개한 뒤에 나온 것으로, 올 초부터 실버게이트는 채권 추가 매각 등을 진행했지만, 손실이 커져 자본금 부족에 시달려 옴
- 실버게이트는 성명에서 최근 산업 및 규제 발전에 비추어볼 때 은행 폐쇄가 최선의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폐쇄 및 청산 계획에 예금 전액 상환이 포함된다고 설명
- '83년 설립된 실버게이트는 '13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 투자자와 거래소의 실시간 암호화폐 전송을 지원하는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해 산업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음
- 업계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은행으로 꼽혀온 실버게이트의 붕괴는 지난해 FTX 파산이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와 유동성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
- 실버게이트는 지난 1월 '22년 4분기에 FTX 파산 여파로 80억 달러 예금 인출 등으로 순손실이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개했고, 3월에는 연례보고서 발표 연기, 지속가능성 평가 착수 등의 이상 징후를 보임
- 이미 지난해 FTX 파산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고, 각종 소송에 연루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고, 이 때문에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실버게이트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됨
- 실제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갤럭시 디지털 등 실버게이트와 파트너 관계에 있던 암호화폐 기업들이 하나둘 관계를 끊었고, 바이낸스 자오창펑 CEO는 실버게이트에서 자산손실이 없다고 직접 발표함
- 암호화폐 업계는 실버게이트가 예금 상환을 발표하고 대출 이행 등을 고려하면 위험 확산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실버게이트 파산 자체가 암호화폐 핵심 인프라가 손상된 것이라고 평가

- 암호화폐를 지탱하는 은행으로 평가되어 온 실버게이트가 FTX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과 대량 자금 인출 등으로 운영중단 및 자발적 청산을 결정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충격을 줌
- '22년 4분기 1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연례보고서 발표 연기와 지속가능성 평가 착수 등 이상 징후를 보인 끝에 청산을 결정했고, 업계는 암호화폐 핵심 인프라가 손상됐다고 평가

[출처]

- Reuter, 'Crypto-focused bank Silvergate plans to wind down following blow from FTX', 2023.03.09.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스위스 은행협회, 스테이블코인 대안으로 블록체인 예금토큰 제시
2. 블록체인과 AI의 접점 확대, 탈 중앙 저장소+탈 중앙 AI 추세 확산
3. 美 블록체인협회,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은행 폐쇄 정보 제공 요청
4. IMF, G20의 디지털화폐 관심 고조 우려...암호자산 도입 위험 경고
5. EU 의회, '데이터법' 통과..IoT 데이터 접속공유·사용 등 규정 제시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스위스]

스위스 은행협회, 스테이블코인 대안으로 블록체인 예금토큰 제시

- 블록체인 예금토큰 백서 발표, 시중은행이 발행해 은행 생태계·규제 적용...안정성과 신뢰성 강조
- 디지털자산 거래, 미래의 결제수단, DLT 기반 금융 생태계 성숙화 등 3대 잠재 수요 제시

스위스 은행협회(SBA)가 스테이블코인 및 소매 CBDC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DT)을 제시하고, DT가 발행 표준성, 높은 유연성, 운용 책임분산 등의 특성으로 광범위한 채택이 가능하다고 강조

* Deposit Token : 시중은행이 예금 청구권을 나타내기 위해 블록체인상에서 발행한 토큰

▶ SBA, 블록체인 예금토큰 백서 발표...시중은행이 발행해 은행 생태계·규제 적용으로 안정성·신뢰성 강조

- SBA가 디지털 스위스프랑 백서*를 공개하고, 은행이 지원하는 안전한 디지털 결제 도구로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DT)을 제시

* The Deposit Token, New money for digital Switzerland, 2023.3

- 백서는 시중은행이 예금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DT가 디지털 금융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은행이 발행해 은행 생태계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기존 은행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

- SBA는 백서에서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된 예금의 다양한 형태와 등장 배경과 목표 등을 설명하고, 디지털 자산 결제 및 결제 실행, 소액 결제, 기업 결제 등 다양한 미래 결제 관련 연구 결과를 공개

- SBA는 DT는 법률 및 규정 준수와 함께 기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추가 타당성 검토와 법률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

- SBA는 DT는 증권감독법에 따라 공개 투자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원장 기반 유가 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입법부와 규제 기관(FINMA)*의 구속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설명

*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

- SBA 외에도 예금토큰 가능성에 주목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 컨설팅 기업 올리버 와이먼(Oliver Wyman)은 JP모건 오닉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고, 미 은행들 모임인 USDF 컨소시엄(USDF Consortium)은 예금토큰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디지털 변혁으로 안전한 디지털 결제수단 필요, 스테이블코인 및 소매 CBDC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 (배경) 백서는 서문에서 디지털 변혁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제수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 많은 중앙은행이 소매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스위스 연방의회와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소매 CBDC가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짓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통화 연구를 진행

- (정의) SBA는 백서에서 DT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예금을 토큰 형태로 발행(tokenisation)한 것으로

설명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디지털 형태라고 정의

- **(평가)** SBA는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화된 예금 형태의 디지털통화를 DT로 제한해 연구하고 있으며, DT가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설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열 수 있다고 파악
- 또한, DT가 스위스 경제 및 기술 주권을 보호하고 ▲금융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보장 ▲디지털 결제와 혁신 동력 강화 ▲개인 및 기업의 결제 가용성·사용성·신뢰성·보안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 DT는 디지털자산 거래·결제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기계 간 결제 등 '이코노미 4.0' 맥락의 결제,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공공재로서 플랫폼 특성을 지녀 시간이 지날수록 적용 분야가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
- **(일정)** SBA는 DT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우선 규제 당국과 협력해 법률 및 규제 문제 해결에 나서고 회원사 상대로 명확성 확보 및 공동 작업 지속에 나설 계획

▶ **(DT 잠재 수요) 디지털자산 거래, 미래의 결제수단, DLT 기반 금융 생태계 성숙화 등 3개 요소 제시**

- SBA는 DT 도입에서 안정성 보장을 핵심으로 파악하고, 고객에게 가장 익숙하고 충분히 검증된 방식인 전통 예금과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이런 점에 주목해 DT는 ▲서로 다른 토큰과 복잡하지 않게 상호 교환하고 ▲항상 동일한 가치로 예금으로 전환 가능한 기능을 핵심으로 삼아 다양한 사례 발굴을 추진
- SBA는 잠재적으로 DT가 ▲디지털 자산 거래 ▲미래 결제수단 ▲DLT 기반 금융 생태계 구축과 같은 영역에서 수요를 새로 마련할 것으로 판단
- **(디지털자산 거래)** 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의 토큰화는 가치사슬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널리 추진되지만, 독점 스테이블코인 사용 때문에 ▲발행자 위험 ▲네트워크 효과 부족으로 인한 확장성 부족 ▲비효율적 자원 할당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반면 DT는 디지털 자산 거래의 완전 자동화된 동시결제를 지원해 결제 위험을 감소시키고, 담보 예치 필요성을 줄이는 대신 기업 자동 정산을 촉진해 큰 폭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강조
- **(미래 결제수단)** DT는 결제 관련해 ▲월렛 기반 소매 결제 ▲아주 크거나 적은 금액 결제 지원으로 비용과 갈등 축소 ▲기업 간 결제 단순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DT가 스마트 계약과 함께 제공되면, 특정 계약을 직접 복제하고 이행을 자동화할 수 있음
- **(DLT 금융 생태계)** 분산형 금융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기존 및 새로운 금융상품의 복제 및 결제 지원이 가능하고, DT는 해당 생태계 성숙도를 높이고 새 애플리케이션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

▶ **(DT 구분) 발행 방식에 따라 표준화 토큰, 공동 토큰, 컬러 토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DT는 언제든지 액면가 일반 예금으로 전환(전환성)할 수 있고, 타 기관이 발행한 DT로 교환(대체 가능성)을 보장해 DT의 가치는 발행은행과 관계없이 스위스 프랑으로 유지됨

- 예금과 마찬가지로 자금 생성 정도는 DT 기본 준비금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경제적·법적·기술적 특성에 따라 ▲표준화 토큰(Standardised Token) ▲공동 토큰(Joint Token) ▲컬러 토큰(Coloured Token) 3가지 범주로 구분
- **(표준화 토큰)** 디지털화폐에 관심 있는 모든 상업은행이 기술 규범 준수와 안전과 유동성을 보장하는 준비금을 통해 자체 발행
- **(공동 토큰)** 상업은행이 발행한 DT를 특수목적법인(SPV)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 준비금으로 가치를 뒷받침됨
- **(컬러 토큰)** 각 상업은행이 기술적 기반과 기본 준비금에 따라 자체 DT를 무료 발행하지만, 모든 은행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
- SBA는 필요한 라이선스와 감독을 공유하는 공동소유 법인이 발행하는 공동 토큰이 가장 유망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과도한 준비금을 요구하지 않아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
- 또한, 공동 토큰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공공재로서 DT 정체성이 명확하고 표준화 토큰보다 준비금을 훨씬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
- 은행이 자체 준비금으로 DT를 발행하고 뒷받침하는 컬러 토큰은 위기상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사용자는 잠재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 DT를 선호해, 예금이 대량으로 유출될 때 뱅크런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DT를 받은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토큰 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컬러 토큰은 너무 많은 파편화를 초래해 관리의 어려움을 높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DT와 여타 디지털화폐 비교]

	Ext. Stablecoins	Retail CBDCs			
Issuers	Unregulated, unsupervised companies	Central banks	(Multiple) individual banks, but with economic and technical standardisation	Consortium of commercial banks via SPV	(Multiple) individual banks
Potential use cases					
Digital asset transactions	Possible	Not possible	Possible	Possible	Possible
Payments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Possible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Possible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CHF DLT-financial ecosystem	Possible	Not possible	Possible	Possible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Client protection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Possible	Possible	Possible	Possible
Stability/convertibility	Not possible	Possible	Possible	Possible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Market penetration/network effects	Not possible	Possible	Possible	Possible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Private CHF money creation	Not possible	Not possible	Not possible	Possible	Possible

■ Not possible
 ■ Theoretically possible, but practical implementation unreasonably complex or unclear
 ■ Possible

- SBA는 DT 간 일부 장단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3개 DT 모델은 모든 경제적,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
-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호환성 문제는 DT의 경우 DT 기본 자산 또는 다른 DLT 프로토콜과 관련된 정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

▶ **(DT 설계 원칙) 퍼블릭 블록체인, 표준 오픈소스 SW, 레이어 2, 수탁 서비스 제공 등을 원칙으로 제시**

- SBA는 DT의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 원칙을 4가지로 제시
- DT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할 때 혁신 잠재력이 극대화되며, 다른 플랫폼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접근 제한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
- DT는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 DT를 사용(구성 가능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표준화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
- DT는 낮은 거래비용, 빠른 결제, 소액 결제 등 효율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자 창출이 필수이며, 이러한 매개변수에 따라 확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레이어 2' 솔루션에서 구현이 바람직
- 고객은 자신의 지갑에 DT를 보관하거나 은행 및 기타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해결 과제) 민법상 지위 보장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요건 정비 필요, 기밀성·개인정보 보장 관련 논의 요구**

- DT는 법률 및 규정 준수와 함께 기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DT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DT 지위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요건 정비가 필요
- 스위스 민법에서 DT는 증권감독법에 따라 공개 투자설명서 작성을 통해, 원장에 기반한 유가 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규제 당국의 명확한 지위 보장이 필요
- FINMA는 '21년 연례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훨씬 강화된 추가 요건을 발표했고, AML-CFT 실사 의무 준수를 위해 거래 관련 모든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식별하도록 함
- 현재로서는 DT도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되며, SBA는 관련 규정이 기술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DT 발행 전 기밀성과 개인정보 보장에 대한 일부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스위스 은행협회가 은행이 예금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소매 CBDC와 스테이블코인보다 안정성과 확장성에서 훨씬 큰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하고, DT 관련 규제 정비를 촉구
- DT는 디지털자산 거래, 미래 결제수단, DLT 기반 금융 생태계 성숙화 등 잠재 수요를 폭넓게 보유하고, 발행 방식에 따라 표준화 토큰, 공동 토큰, 컬러 토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

[출처]

- Ledger Insight, 'Swiss Banking Association proposes deposit tokens on public blockchain', 2023.03.16.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블록체인과 AI의 점점 확대, 탈 중앙 저장소+탈 중앙 AI 추세 확산

- 블록체인과 AI, 데이터 인프라의 AI 활용에서 점점 형성...인프라의 탈중앙화와 신규 서비스 등장 가속
- 탈 중앙 저장소 및 탈 중앙 오라클 전송 등이 대안으로 등장, 비용 및 사이버보안 문제 해결이 관건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 및 인텔리전스 모델이 AI 기능 제공을 위해 분산화된 접근을 채택하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접점이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 분산형 데이터 저장소와 분산형 AI가 미래 트렌드라는 분석도 제기됨

▶ **블록체인과 AI, 데이터 인프라의 AI 활용에서 점점 형성...인프라의 탈중앙화와 신규 서비스 등장 가속**

- AI와 블록체인은 도입이 급증하는 대표적 파괴적 기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고, 기술 진화를 위해 해결할 과제가 많아 남았지만 두 기술 간 접점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진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
- 두 기술은 모두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데이터 인프라 관련 해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섬
-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인프라에서 저품질 데이터가 비효율적으로 저장되고 공유되면, 인텔리전스 계층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사슬 전반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 고품질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됨
- 블록체인 업계도 웹 3 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해 핀테크 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Bitcoin Loophole*, Numerai* 등)이 등장해 사용자에게 통찰력을 제공
 - * robo-advisory : 사용자가 위험과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면, AI 플랫폼이 시장 가격, 거시 경제 데이터 및 소셜미디어와 같은 대체 데이터를 소싱해 사용자별 인사이트를 제공
 - * Bitcoin Loophole : AI를 사용해 플랫폼 사용자에게 거래 신호를 제공하는 트레이딩 애플리케이션으로 8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주장
 - * Bitcoin Loophole : AI를 사용해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헤지 펀드처럼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 또한, 분산형 AI 시장은 한쪽은 AI 솔루션을 구축하는 개발자가, 다른 한쪽은 솔루션을 사용하자는 소비자 및 기업이 위치해 상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의 분산된 특성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대부분 상업적 관계와 거래가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됨
- AI 개발자는 스마트 계약 입력으로 가격 책정 등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솔루션 사용 대가를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인사이트, 사용기간 유지보수 수수료 등으로 부과할 수 있음
- 탈중앙화된 AI 마켓플레이스로 싱귤래리티넷(SingularityNET)과 Fetch.ai 등이 주목받음
 - * 싱귤래리티넷은 AI 도구를 위한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로 개발자는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게시
 - * Fetch.ai는 재사용 가능한 모듈식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분산형 머신러닝 솔루션을 제공
- 새로운 모델 등장과 함께 시장의 관심은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데이터 인텔리전스와 같은 데이터 인프라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고 있음

▶ (데이터 저장) 이더리움의 AWS 클라우드 스토리지 의존도 과도 지적, 분산형 스토리지를 대안으로 주목

- AI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decentralized data storage)가 탈중앙화 AI(decentralized AI)의 핵심 구성요소라는 평가가 지배적
- 블록체인 업계는 중앙화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규모가 커질수록 거버넌스, 규제 준수, 인프라 등에서 위험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리도(Lido), 코인베이스(Coinbase) 등이 네트워크를 중앙화한다는 우려를 제기
- 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저장 및 처리 능력은 단일 중앙집중 방식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분산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이더리움의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스토리지 의존도가 과도하다고 지적
- 이런 환경에서 분산형 스토리지 솔루션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확장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
- 분산 스토리지는 문서를 분할하고 암호화하여 전 세계 여러 서버에 저장하고, 문서 소유자만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개인 키를 가지며, 검색은 알고리즘이 이러한 개별 부분을 가져와 사용자에게 문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분산 스토리지를 보안 관점에서 보면, 개인키가 1차 보호 계층, 분산저장소가 2차 계층이 되며, 네트워크의 특정 노드나 서버가 해킹되면, 암호화된 데이터는 일부 파일만 접속이 허용됨
- 현재 탈중앙화 스토리지 주요 프로젝트로 Filecoin, Arweave, Crust, Sia, StorJ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스토리지는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됨
- 페이스북은 매일 4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Arweave는 122테라바이트 처리에 그치며, 1테라바이트 데이터 저장에 AWS는 10달러지만, Arweave는 1,350달러의 비용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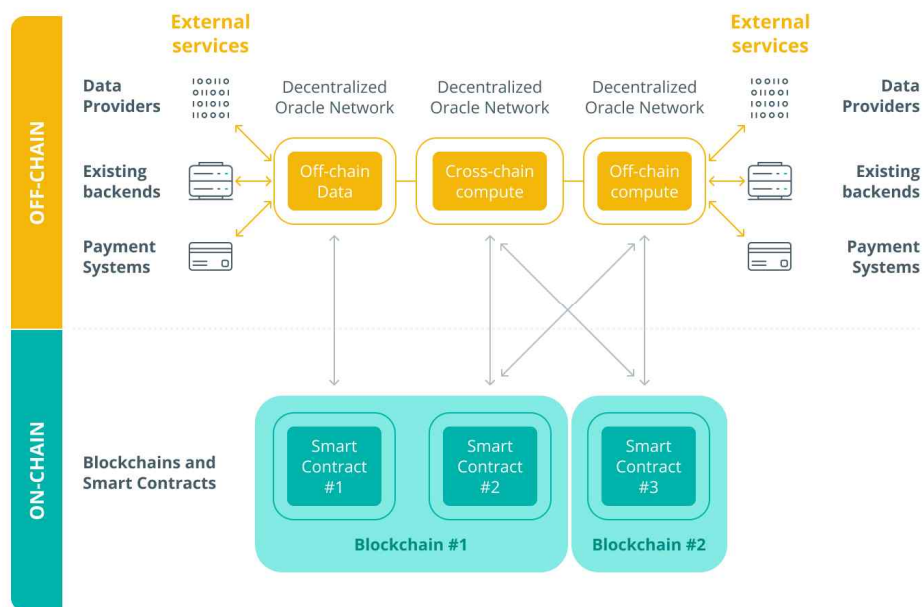
▶ (데이터 전송) 탈중앙화 장점이 가장 큰 분야, 오라클 보안 취약점 노린 사이버 공격 해결이 관건

- 데이터 전송은 탈중앙화 이점을 가장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며, 중앙화된 API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도 AI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이 뚜렷한 정점이라는 분석
- 탈중앙화된 데이터 전송 및 공유는 주로 오라클(Oracle)*을 통해 이뤄지지만, 오라클은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해커들의 빈번한 공격 대상임*
- * Oracle : 블록체인을 외부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계층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 데이터와 연결하고 트랜잭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 최근 블록체인 기반 Bonq 프로토콜은 오라클 해킹으로 1억 2,000만 달러의 손실을 봄
- 사이버 범죄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크로스체인 브리지 해킹 외에 오라클 취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이는 탈중앙화된 데이터 전송 인프라와 프로토콜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DON)가 등장했고, DON은 고품질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고 엔드투엔드 탈중앙화를 구현함
- 입력 오라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프체인 데이터 소스에서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전송 및 검증하고, 출력 오라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프체인 활동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고 특정 작업 트리거를 지원함

- 크로스체인 오라클은 두 블록체인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며, 이는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이 개선됨에 따라 기본이 될 수 있으며, 컴퓨팅 지원 오라클은 오프체인 연산을 사용해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제공
- 그동안 체인링크가 오라클 데이터 전송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네스트(Nest)와 밴드(Band) 등 프로토콜이 탈중앙화된 오라클 전송을 시작했고, 순수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 외에 체인 API, 크립토 API 등의 플랫폼이 DON을 이용해 오프체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API를 제공하기 시작함

[다양한 유형의 오라클 작동 방식]



출처 : Chain,Link

▶ (데이터 인텔리전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활용 증가

- 데이터를 저장, 공유, 처리하는 모든 인프라의 기능을 취합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계층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음
- AI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기존 API를 이용해 데이터 소싱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제품의 중앙화와 솔루션 견고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 AI와 블록체인은 도입이 급증한 대표적 파괴적 기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고, 데이터 인프라의 AI 활용에서 접점을 이뤄 새로운 진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
- 탈중앙화 저장소와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DON)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초기 시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는 지적

[출처]

- Cointelegraph, 'AI set to benefit from blockchain-based data infrastructure' 2023.03.1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블록체인협회,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은행 폐쇄 정보 제공 요청

- 협회, 암호화폐 기업 불공정을 강조...암호화폐 기업 계좌 폐쇄 등이 은행 위기에 미친 영향 조사 방침
- 뉴욕금융서비스국, 은행 폐쇄는 암호화폐와 무관...시그니처 은행 경영진과 신뢰 붕괴가 원인이라 주장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규제 당국의 암호화 은행 폐쇄 결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하고, 연방 정보 자유법 (FOIA)*에 근거해 규제 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당국의 脫 은행 결정이 은행 폐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할 방침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모든 사람은 연방기관 기록 또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미연방법

▶ 협회, 암호화폐 기업 불공정을 강조...암호화폐 기업 계좌 폐쇄 등이 은행 위기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방침

-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RS), 통화감독청(OCC)에 3개 암호화폐 친화은행 폐쇄 결정에 대한 FOIA 요청서를 제출
-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회장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의 서비스 거부가 은행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
- 협회는 FOIA 요청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계좌 폐쇄 및 신규 계좌 개설 거부와 같은 탈은행(de-banking) 결정에 대한 규제 기관의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할 방침
- 미 금융 규제 당국은 최근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등 3개 은행을 폐쇄했고, 협회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탈 금융이 은행 파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협회 견해에 대해 시그니처 은행 폐쇄를 결정한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시그니처 은행 폐쇄는 암호화폐와 아무 관련이 없고,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
- NYDFS는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암호화폐 연관설을 모두 부인하고, 시그니처 은행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신뢰 위기가 최종 은행 폐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
- 업계는 협회 조사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금융권이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외면하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미 블록체인협회가 규제 당국에 연이은 암호화폐 친화은행 폐쇄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폐쇄, 신규 계좌 개설 거부 등이 은행 위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고 발표
- 시그니처 은행 폐쇄를 결정한 뉴욕금융서비스국은 은행 폐쇄 관련 암호화폐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은행 경영진이 신뢰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최종 폐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

[출처]

- FX Street, 'Blockchain Association calls on FDIC, Fed to provide documents on de-banking crypto firms', 2023.03.16.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IMF, G20의 디지털화폐 관심 고조 우려...암호자산 도입 위험 경고

- G20, 스테이블코인 및 CBDC 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관심 증대...잠재적 위험, 동반 상승 경고
- IMF, 암호화폐 자산의 장점은 이론화 단계지만 위험은 현실화됐다 경고...신흥 국가의 신중한 접근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G20에 암호자산의 광범위한 확산이 은행 예금과 대출 감소 등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신흥 국가에 암호화폐 법적 규제에서 국제 표준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

▶ IMF, 암호화폐 자산의 장점은 이론화 단계지만 위험은 현실화됐다고 경고...신흥 국가의 신중한 접근 촉구

- IMF는 '암호화폐 자산의 거시 금융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G20이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와 같은 디지털화폐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 * Macrofinancial Implications of Crypto Assets
-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특히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 기구들이 제시하는 법적·규제적 대응을 주목해야 한다고 권고
- IMF는 암호화폐 자산을 ▲국내 안정성 ▲대외 안정성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분석하고, 암호화폐 자산이 신속한 국경 간 결제 및 금융 포용성 등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단계라고 평가절하
- 오히려, 암호화폐 자산의 광범위한 사용이 통화 정책, 환율 관리, 자본 흐름 관리, 재정 지속가능성 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IMF가 제안한 디지털 자산 정책 프레임워크를 참고 모델로 제시
- IMF는 시중은행의 암호자산 유동성으로 인한 예금 손실은 ▲대출 제한 ▲중앙은행 지급 준비금 조정 ▲글로벌 금융안전망 훼손 등을 초래하고 잠재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하지만, IMF는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이 점차 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가마다 위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채택은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 및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정책 입안자들은 암호자산이 거시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결론에서 IMF는 암호화폐 장점은 아직 이론에 그치고 있지만, 위험은 현실화됐다고 강조

- IMF가 G20과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CBDC 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와 관련 데이터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하고, 암호화폐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
- IMF는 암호화폐 자산의 정점은 아직 이론에 그치고 있지만, 위험은 현실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취약화와 이를 통한 잠재적 불안정 고조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

[출처]

- Tronweekly, 'Crypto Chaos Looms: IMF Warns G-20 Of Dangers In Widespread Adoption', 2023.03.1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EU 의회, '데이터법' 통과..IoT 데이터 접속·공유·사용 등 규정 제시

- EU, GDPR처럼 글로벌 표준 정착 통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 기대...3월 말 3자 회담 착수로 법제화 추진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스마트 계약, 중지 및 재설정 허용 등 대대적 변화

유럽의회가 IoT와 연결된 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접속·공유·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데이터 법안을 가결해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규제 등장이 예상되며, 스마트 계약에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전망

▶ 산업계,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지식재산권 침해 지적...스마트 계약, 중지 재설정 허용 등 큰 변화 전망

- EU 데이터 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해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각종 경제 행위자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
- EU는 과거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켰던 것과 유사하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 선도 리더로 도약을 목표로 함
- EU는 동 법안을 산업 데이터 순환 장벽을 제거한 획기적 입법이라고 강조했고, 유럽의회는 찬성 500명, 반대 23명, 기권 110명으로 압도적 지지로 가결
- 데이터 법은 IoT 사용자가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에 접속하고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개인 데이터는 물론 IoT 제품이 수집한 非 개인 데이터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 또한, 법안은 스마트 계약 관련해 ▲스마트 계약 접근제어 ▲영업 기밀 보호 ▲스마트 계약 중지 및 재설정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해 스마트 계약의 불변성이 크게 변화할 전망
-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에 대해 EU가 데이터 경제를 규제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고, 지식재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히 블록체인 업계는 자동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근본적 특성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
- 유럽의회가 데이터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3자 회담으로 불리는 EU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의 협상이 오는 3월 28일로 예정되어, 입법화가 본격화될 예정

- EU 의회가 IoT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개인 및 기업의 소유권과 활용,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데이터 법안을 가결해 산업 데이터 관련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등장이 예상됨
- EU는 데이터 법안을 GDPR과 같은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켜 시장 선도 리더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등 산업계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

[출처]

- Coindesk, 'EU Parliament Passes Bill Requiring Smart Contracts to Include Kill Switch', 2023.03.14.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FTX 붕괴가 불러온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
2. 홍콩, 1국 2개 암호화 시스템으로 주목..새로운 암호화 허브로 주목
3. 美 텍사스주, 비트코인 마이닝 붐 형성..사상 최대 전력 소비 기록
4. 美 국세청, 재무부와 공동으로 NFT 세금 부과 추진..의견 수렴 착수
5. 美 하원,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 발의..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FTX 붕괴가 불러온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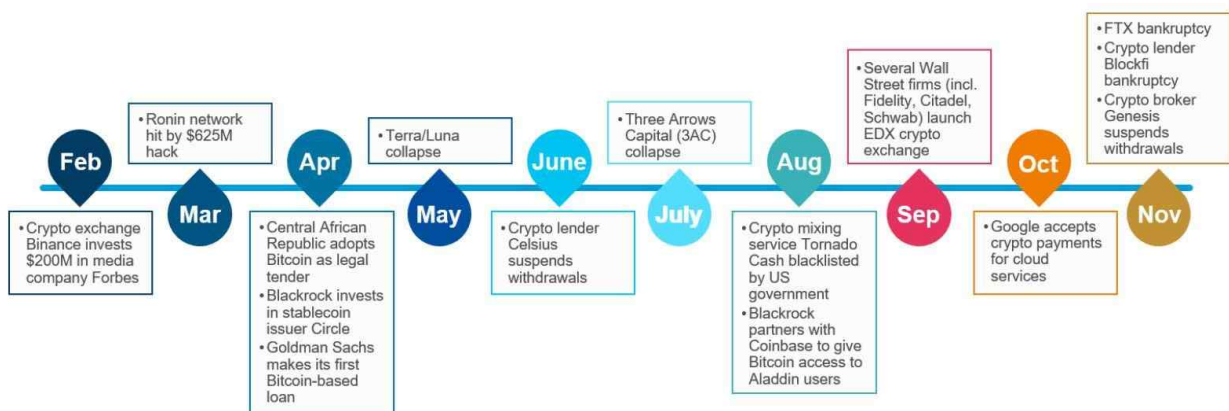
- FTX 붕괴, 규제기관에 규제 필요성을 부각...디지털자산에 더 엄격한 규제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암호화폐의 변동성·보안성·위험성 등 완화...투자 규칙 및 소비자 보호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

FTX 파산으로 암호화폐에 경각심이 크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으로 규제가 정교해져 암호화폐 산업 신뢰 회복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

▶ FTX 붕괴, 정부 및 규제기관에 규제 필요성을 부각...디지털자산에 더 엄격한 규제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22년 11월 FTX 붕괴는 전 세계 정부 및 금융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강력 규제 움직임을 촉발함
- 당시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수용해 적극적인 도입에 나섰고, 다른 국가들은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상황
- 암호화폐 거래소와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FTX는 계열사가 FTX 네이티브 토큰으로 자산 상당량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력 관계에 있던 바이낸스가 FTX 자산 매각을 결정했고, 고객 자금 인출로 이어짐
-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고려했지만, 고객 자금 부실 관리 정황과 이로 인한 규제 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인수를 철회했고, 결국 FTX는 파산 신청(채터 11)으로 붕괴했고, 충격이 암호화폐 전반으로 확산됨
- FTX 설립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Sam Bankman-Fried)는 금융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수십 건 소송이 제기됨
- 결론적으로 FTX 붕괴는 정부와 규제기관에 암호화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한 계기로 작용함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주요 이슈]



▶ (유럽) FTX 붕괴 전부터 EU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시도... '23년 4월 MiCA 최종 도입 결정 전망

- 유럽에서는 FTX 붕괴 전부터 EU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22년 6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암호자산 관련 포괄적 규제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도입에 잠정 합의했고, '22년 9월 MiCA 프레임워크를 공개
- MiCA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보호 개선 ▲명확한 암호화폐 산업 행위 확립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 구현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고, '22년 11월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번역* 등 기술적 문제로 '23년 4월로 연기된 상태
 - * EU에서 MiCA와 같은 법률 문서는 회원국의 24개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
- **(프랑스)** 프랑스는 '19년 4월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행동 계획(Action Plan) 형태로 발표해 비즈니스 성장과 혁신 모색에 나섬
- 당시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FMA)*은 PACTE법*을 기반으로 암호화 자산서비스 제공자 및 ICO 관련 새 규정을 발표했고, '20년 12월 조례(2020-154452)를 통해 암호화 자산 규제를 보완함
 - * Financial Market Authority
 - * 기업의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법(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 프랑스 암호자산 규제는 '21년 6월에 완성되어 현재 시행 중이지만, FTX 붕괴 이후 너무 느슨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더욱 강력한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
- 현 프랑스 암호화 자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서비스기업(DASP)에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규정해, 재정 자원 및 사업 행위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됨
- '23년 1월 프랑스 의회는 암호화폐 기업이 서비스 제공 요건으로 규제 당국의 허가를 의무화한 한 규제를 '23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시가가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으로 '24년 1월로 시기를 늦춤
- 프랑스 의회 결정에 대해 반응은 엇갈렸지만, 프랑스가 암호화폐 허브가 될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는 평가가 제기됨
- '23년 3월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Franç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허가제를 라이선스 방식으로 대체하고, MiCA 발효 전에 DASP에 프랑스 라이선스 획득 의무 부여를 제안
- **(영국)** 영국 정부는 '22년 4월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는 의지를 공식 발표했고, 해당 노력의 일환으로 '23년 2월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암호화 자산 활동 규제 계획을 발표
-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암호화폐 대출에 대한 새로운 제도 지원으로 암호화폐 자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규제를 향후 비전으로 제시
-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을 보유해 투자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중개인과 수탁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
- 영국 암호화폐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자산 프로모션이 유사한 위험을 가진 타 금융서비스 상품과 동등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음

- '23년 1월 영국 국가범죄청(UK's National Crime Agency)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국가 사이버 범죄수사대(NCCU, The National Cyber Crime Unit)를 신설해 대응 능력을 강화함
- 영국은 암호화폐 부정 사용 방지에 주목해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을 도입해 암호화폐 범죄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더 빠르게 지원하는 조치를 도입했고, 영국 자산을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범죄자를 별도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함

▶ (미국) 미 의회, 암호화폐 정의를 위해 20여 개 법안을 통과...정부 기관마다 접근법 달라 혼선 발생

- 미국 의회는 세금, 투자, 결제 등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정의를 위해 2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관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
-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와 국세청(IRS) 모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지만, IRS는 최근 암호화폐를 교환 매체, 계좌 단위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정의해 과세 방침을 공개함
- FTX 붕괴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3개 연방 기관(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이 암호화폐의 위험성(사기, 변동성, 전파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는 등 대처 속도도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
- 연방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를 요구한 상황에서, 같은 달 뉴욕주 의회는 암호화폐로 벌금·세금·수수료 등 주 정부의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해 연방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임
- 일리노이주는 연방정부 암호자산 규정 도입이 지연되자, 주 차원에서 암호화 기업 라이선스 제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
- 일리노이 규정은 암호화폐 기업에 뉴욕주 비트라이선스(BitLicence)와 유사한 라이선스 취득과 고객자산 보관을 위한 신탁회사 설립 의무를 부여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타 가상자산 기업은 투자 공시, 고객자산 보호, 해킹 등 사이버 방어 구축,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함
- 텍사스주 하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준비금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
- 각 주가 암호화 자산 규정 도입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자산이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됨
- 디지털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디지털 자산 규제가 CFTC 관할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대다수 암호화폐 기업은 이를 선호함

▶ (아시아) 인도, 암호화폐 강력 규제 방침...대만, 규제 체계 도입 착수...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정 공개

- **(대만)** 대만은 FTX 붕괴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긴박감이 크게 높아져, '23년 3월 대만 정부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를 암호화폐 공식 규제기관으로 임명할 방침을 공개
- *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 대만은 중화민국 중앙은행과 FSC 두 개의 금융 기관이 존재하며, 이번에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외환 규제를 전담하고, FSC가 은행 규제, 증권 및 선물, 자금세탁방지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리

- 대만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 '23년 6월 새로운 법의 틀을 확정하고, '23년 후반기에 초안을 공개할 방침
- 대만 FSC는 NFT 등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고, 적절한 NFT 분류 가이드라인 개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규제 대신 자율 규제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짐
- **(이스라엘)** FTC 파산 직후, 이스라엘 재무부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과 암호화폐 발행자 규제를 위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
- 재무부는 프레임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이 이스라엘 증권법 적용을 받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암호화폐 결재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 증권 당국의 권한 확대 등을 제안
- 증권 감독 당국에 암호화폐 결재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감독관 라이선스 규정 감독 및 디지털 자산 매매에 대한 과세 프레임워크 제정 등 광범위한 권한 부여를 제안
- '23년 1월, 이스라엘 증권감독청(ISA)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위한 이스라엘 증권법 개정안이 포함됨
- 초안은 '23년 2월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의회 승인을 통과하면 '23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
- **(인도)** 인도는 일찍부터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의 잠재적 위험 경고에 나서, '13년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사용자, 보유자, 거래자에게 가상화폐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
- RBI는 10년 만인 '23년 1월, 디지털 통화 위험을 집중 부각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유사한 경고를 다시 한번 강조
- RBI는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변동성이 큰 자산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규제에 대한 공통된 접근방식의 적용이라고 강조
- RBI는 보고서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사용을 주장하고, 동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기업은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23년 초, RBI 총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23년 3월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보관 및 기타 관련 금융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을 발표
 - * 인도는 '22년 기준 인구 29%가 암호화폐를 보유해 암호화폐 채택률이 글로벌 4위를 기록
- **(홍콩)** 홍콩은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상품으로 간주해왔고, 홍콩 금융관리국(HKMA) 역시 별다른 규제 없이 호황을 누림
- HKMA는 지난해 암호화폐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계획과 토론 문서를 공개했고,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 '23년 1월 HK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생성, 소멸에 대한 새 규제 도입을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 내역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암호화 키 저장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제시
- 또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HKMA 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정

▶ (아프리카) IMF, 암호화폐 친화적인 아프리카에 강력 규제 권고...남아공, 암호화폐 광고법 도입

- FTX 붕괴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아프리카 암호화폐 시장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
- '22년 11월 IMF는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암호화폐가 역외 불법 자금 송금에 악용될 수 있고, 광범위한 암호화폐 사용이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제안
- IMF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25%만이 공식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며, 2/3는 각종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레소토, 시에라리온, 카메룬 등은 암호화폐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됨
-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수용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광고규제위원회가 비윤리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법에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새 광고법 조항은 암호화폐 상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잠재적 투자 손실 가능성을 분명하게 알리고, 광고가 이해하기 쉽고, 기능·혜택·수익·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 암호화폐 규제 강화, 암호화폐의 변동성·위험성·보안성 개선...투자 환경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추세

- 관련 업계는 최근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의 변동성, 위험성 등이 개선됐고, 점차 투자 규칙 및 소비자 보호 등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되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확산 및 신뢰 회복을 앞당기고 있다고 평가
- 또한, 규제 당국과 사용자 모두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인프라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중앙화 기관에도 위험이 존재하지만, 중앙화 기관이 더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

- FTX 붕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의 변동성, 위험성 등이 완화됐고 투자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이 개선되어 시장 회복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
- EU는 FTX 붕괴 전부터 암호자산 규정 도입을 추진해 '23년 4월 관련 프레임워크 MiCA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이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임

[출처]

- Paypers, 'Regulating crypto in a post-FTX world - initiatives and timelines', 2023.03.20.
- Paypers, 'FTX is not a crypto failure, but a centralisation failure. Learnings from the FTX collapse', 2022.11.29.
- OMFIF, 'India emerging as leader in global crypto framework efforts', 2023.01.18.
- Paypers, 'MiCA final vote is postponed due to translating issues', 2023.03.1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홍콩]

홍콩, 1국 2개 암호화 시스템으로 주목...새로운 암호화 허브로 주목

- 홍콩, 암호화 허브 야망을 공식화...라이선스 도입 및 거래 합법화로 미국·싱가포르 이탈 기업 흡수 계획
- 홍콩 재무부·SFC·통화청의 연이은 암호화폐 친화 정책 발표+중국의 은밀한 지원...암호화 허브 지위 근접

홍콩이 암호화 허브로서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하나 국가·두 개의 암호화 시스템이 공존하는 모델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홍콩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 및 규제 도입은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평가

▶ 홍콩,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및 개인 투자를 허용한 규정 도입 임박...중국의 나침반 역할로 이목 집중

- 암호화폐 업계는 '22년 디지털 통화 시장붕괴와 암호화폐 기업의 파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새로운 거점 도시가 다수 등장했고, 특히 홍콩이 가상자산 허브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
- 홍콩은 중국 본토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 및 결제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까지 제한한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암호화폐 플랫폼과 개인 투자자 거래 등을 합법화한 규정 도입을 앞두고 있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의 이목을 집중시킴
-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의 암호화폐 움직임을 묵인한 상태에서 결과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홍콩의 잠재적 암호화폐 합법화가 중국 암호화폐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분석
- 업계는 중국이 홍콩 암호화폐 합법화를 통해 ▲암호화 정책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 ▲암호화폐 연계상품 및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출시 ▲관련 거래 및 비즈니스 회복력 등을 주시하는 것으로 추측
- 홍콩의 암호화폐 합법화가 성공할 경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합법화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 중국 암호화폐 규제가 전면 금지에서 일상적 규제 준수로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본토,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위해 변화 가능성 고조

- 중국은 금융기관 및 결제기업의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ICO를 전면 금지하며,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는 허용하지만,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 '17년 중국은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90%를 차지하던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고, '19년 6월 중국 인민은행(PBOC)은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 사이트 차단과 암호화폐 거래 중지를 발표
- 당시 중국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가 실제 가치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가격 조작이 쉽고 계약이 중국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 위험성을 강조
- 하지만 올해 들어 전 PBOC 통화정책위원 출신 황이핑((Huang Yiping) 베이징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금지가 충분히 효과적이었지만, 디지털 위안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임

- 황 교수는 암호화폐 금지 이후,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투자자 해외 유출이 중국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경고
- 이런 견해에 기반해 최근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는 중국 본토가 홍콩의 잠재적 암호화폐 허용을 통해 경제 전반 및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분석
-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키 캐피탈(Hashkey Capital) 덴 차오 CEO는 홍콩의 암호화폐 허용이 성공으로 판명되면, 중국 다른 지역으로 홍콩 모델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전망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

▶ 홍콩, 암호화 허브 야망을 공식화...라이선스 도입 및 거래 합법화로 미국·싱가포르 이탈 기업 흡수 계획

- 홍콩은 글로벌 암호화 허브에 대한 야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정책을 더욱 매력적으로 개선하고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를 도입해 관련 기업 유치에 공식적으로 나선 상황
- 홍콩은 현재 200만 홍콩 달러 미만 수익에 대해서는 8.25%의 법인세를, 이를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16.5% 법인세를 부과해 세금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평가
-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홍콩을 암호화폐 친화적인 관할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홍콩이 사업 환경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
- 하지만, 최근 글로벌 암호화 허브 경쟁에 뛰어들 두바이의 경우 9%의 고정 세율을 적용하고, 스위스는 8.5% 법인세를 적용하는 등 세금에서 홍콩의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
- 더욱이 두바이, 스위스 등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 도입 및 정비를 마치고 이미 시행에 나서 암호화폐 산업 명확성 부분에서 한발 앞섰다는 평가
- EU가 '22년 6월 디지털자산의 포괄적 규제안인 MiCA 도입에 합의했고, 영국 정부가 '23년 초에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을 공개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도 중국 본토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홍콩으로서는 불리한 여건이라는 평가
- 하지만, 최대 암호화폐 시장인 미국이 규제 혼란기에 빠져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탈미국 경향이 강해지고, 주요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 확산을 낙관하면서 비즈니스 거점으로 홍콩을 주시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지적
- 업계는 홍콩이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 도입과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등을 통해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 이탈 기업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평가

▶ 홍콩 진출 기업, 거래 플랫폼·블록체인 인프라·보안기업 등 다양하게 포진...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존재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3년 2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새 규정을 공개하고, 플랫폼의 소매 투자자 서비스 제공 여부, 고객 온보딩 및 토큰 승인에서 적합성 보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 범위 등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SFC 줄리아 령(Julia Leung) CEO는 SFC는 '18년부터 '동일사업, 동일위험, 동일규칙' 원칙에 따른 조치를 적용했다고 강조하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 혼란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와 주요 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 세계 규제 당국의 합의를 도입한다고 강조
- SFC는 기존 플랫폼을 비롯한 신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새로운 제도에 맞는 시스템과 통제를 도입해야 하고, 라이선스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
- SFC는 웹 사이트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규제 현황을 공개하고, 투자자 및 금융교육위원회(IFEC)*와 협력해 홍콩 시민의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
 - * Investor and Financial Education Council : SFC 자회사로 홍콩 시민에게 금융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12년 설립
- 중국이 여전히 암호화폐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중국 시장이 여전히 블록체인 거대 시장으로 남아있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기반을 확보할 경우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석
- 홍콩 폴 찬(Paul Chan) 재무부 장관은 '22년 10월 이후 약 80개 암호화폐 기업이 진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히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기업 ▲가상통화 월렛 및 결제기업 ▲웹 3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업이 포함됐다고 주장*
 - * 폴 찬 장관은 홍콩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은 중국계 기업이 가장 많고, 캐나다, EU,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권역에서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
- 실제 홍콩 진출을 추진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BTSE 헐리 류 CEO는 중국 진출을 원하는 암호화폐 기업이 홍콩에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강조하고 홍콩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 대다수는 중국 암호화폐 시장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지적

▶ 홍콩 재무부·SFC·통화청의 연이은 암호화폐 친화 정책 발표+중국의 은밀한 지원...암호화 허브 지위 근접

- 홍콩 재무부는 올해 초 홍콩이 웹 3 황금기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720만 달러의 예산 책정과, 규제기관·정책 입안자·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의제 발굴에 나선다고 발표
- 재무부의 웹3 투자 계획 발표는 SFC의 라이선스 제도 도입 방침과 홍콩 통화청의 위험 기반 및 민첩한 접근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침 발표로 이어졌고, 후오비 등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냄
- 중국 지도부도 홍콩의 금융시장 경쟁력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홍콩의 암호화폐 합법화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홍콩이 단기간 내 암호화 허브 지위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음

- 홍콩은 중국이 강력한 암호화폐 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플랫폼 및 개인 투자자 거래 등을 암묵적으로 합법화한 규정 도입을 추진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이목을 집중시킴
- 홍콩은 재무부, SFC, 통화청 등 규제기관이 연이어 새로운 규정 도입을 발표해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싱가포르에서 이탈한 기업들을 먼저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

[출처]

- CNBC, 'One country, two crypto systems: Hong Kong harbors crypto hub ambitions despite China's crackdown' 2023.03.19.
- SFC, 'SFC consults on proposals to regulate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2023.02.2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텍사스주, 비트코인 마이닝 붐 형성...사상 최대 전력소비 기록

- 서부 텍사스, 세금 인센티브 및 높은 친환경 발전 비중으로 채굴기업 집중...전력 소비 3배 이상 증가
- 주 의회, 비트코인 소유자·채굴자·개발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더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추진

텍사스 마이닝 산업이 암호화폐 산업침체와 채굴 전력에 대한 가중 세금 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붐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회의 채굴자 보호법 등 親 산업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

▶ 州 의회, 비트코인 소유자·채굴자·개발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더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추진

- 텍사스 블록체인위원회 리 브래처(Lee Bratcher) 회장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약 2,100메가와트 전력을 소비해 전년에 약 75% 증가세를 보였고, '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
- 텍사스주 전력망 운영사인 전기신뢰성 위원회(ERCOT)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전력 수요는 올해 텍사스 주의 최저 예측 피크 부하(lowest forecast peak load)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브래처 회장은 비트코인 채굴업계가 각종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암호화폐 기업 파산과 규제 당국의 디지털 채굴 전기 사용에 대한 특별 과세 등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등장을 예로 제시
- 미 재무부는 3월 초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채굴시설 전력 사용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3년에 걸쳐 최대 30% 부과하고, 채굴기업에 사용한 전력량과 전력 유형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 또 뉴욕은 올해 화석 연료 발전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했고, 다른 주에서도 이를 따를 전망
- 하지만, 텍사스의 경우 일부 카운티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3년 ERCOT 에너지 수요의 39%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마이닝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임
- 지난달, 맥캐미(McCamey) 채굴장에서 사용된 173,000 메가와트 전력 중 60%는 전력망에서 충당했고, 40%는 인근 풍력 발전소에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발전 비중이 높은 것도 텍사스의 주요 특징
- 또한, 텍사스주 의회는 '23년 3월 비트코인 소유자, 채굴자,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에서 채굴자에게 어떠한 법률의 제한 없이 채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명시

- 미 텍사스 마이닝 산업이 암호화폐 기업의 연이은 파산과 채굴 관련 전력 사용에 대한 특별 과세 도입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붐을 형성했다는 분석
- 텍사스의 채굴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과 높은 친환경 발전 비중 등이 채 기업에 매력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 텍사스 주 의회는 채굴자 보호 법안을 발의해 더욱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섬

[출처]

- Reuter, 'Bitcoin mining booms in Texas', 2023.03.2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국세청, 재무부와 공동으로 NFT 세금 부과 추진..의견 수렴 착수

- NFT를 룩스루 분석에 따라 수집품 여부 판단, 수집품일 경우 최대 28%의 소득세율 부과 방침 공개
- 가상공간 거래권 등 非 수집품 자산은 NFT도 非 수집품으로 판단...업계, 합리적 접근이라고 호평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대체불가 토큰(NFT)을 세법상 수집품으로 취급하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과세 방안 공개와 함께 대중적 의견 수렴에 나섰고, 업계는 합리적 접근이라고 환영 입장을 발표

▶ 가상공간 거래권 등 非 수집품 자산은 NFT도 非 수집품으로 판단...업계, 합리적 접근이라고 호평

- 국세청(IRS)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하는 과세 방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침 발표 계획과 NFT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표
 - * IRS, Treatment of certain nonfungible tokens as collectibles, Notice 2023-27
- IRS는 통지에서 NFT를 세법 코드상 408(m)조의 수집품(collectibles)*으로 분류하고, NFT에 수집품 관련 조항을 적용해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28%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
 - * 미 규정에 따르면, 수집품은 ▲모든 예술작품 ▲각종 골동품 ▲금속 및 보석 ▲우편 및 동전 ▲알콜 음료 등 기타 개인 유형자산 등이며, 특정 주화 및 금괴는 제외한다고 규정
- IRS와 재무부는 특정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지침 발표 전까지 NFT의 수집품 여부는 룩스루 분석*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
 - * look-through Analysis : 증권 거래 소유권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으로,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함
- 전통적 수집품인 보석의 경우 보석 소유권 인증에 사용된 NFT 역시 수집품에 해당하지만, 세법 코드상 수집품으로 속하지 않는 가상환경 토지개발 권리 등은 해당 NFT 역시 수집품이 아니라고 설명
- IRS는 현재 디지털 파일 자산의 예술작품 구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지침에서 사용될 NFT 정의 ▲룩스루 분석의 타당성 ▲NFT의 불법성 판단 등에 대한 대중적 의견을 요청
- 법률 및 조세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을 기존 세금 코드에 맞추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IRS 접근방식이 합리적이며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가 우선하여 고려되고 있다고 평가
- 하지만, 연방소득세 차원에서 NFT 취급 방침이 불분명해 연방 차원의 지침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

- 미 국세청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하는 과세 방침을 정하고, NFT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28%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
- 두 기관은 6월까지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관련 업계는 IRS의 접근이 합리적이고, 암호화폐 기업에 적극적 의사 개선 기회를 제공해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긍정 평가

[출처]

- irs, 'IRS issues guidance, seeks comments on nonfungible tokens', 2023.03.2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하원,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 발의...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

- BRCA, 수탁서비스를 제외한 채굴·월렛 SW 등은 금융 기관 아니라고 규정...규제 대상에서 제외
- 업계, '21년 제안된 인프라 법안이 과도한 규제로 산업 경쟁력 훼손 지적...BRCA 도입 촉구 입장 발표

미 하원 톰 에버(Tom Emmer)와 대런 소토(Darren Soto) 의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기업을 송금 규제에서 제외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을 발의

*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 **BRCA, 수탁서비스 외 채굴·월렛 SW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 단순화...업계, 관련 규정 도입 촉구**

- BRCA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 브로커(brokers) 및 주별 송금 규제에서 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해 블록체인 개발자 및 관련 서비스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춤
- 두 의원은 연방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맞지 않는 법적 정의를 강조해 미국 블록체인 산업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아니라는 간단한 규정 도입을 주장
- 에버 의원은 채굴이나 월렛 SW 등의 서비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서비스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미국 기업에 규제에 대한 신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
- 동 법안은 암호화 관련 서비스에서 소비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 외에는 등록 및 라이선스 등을 요구하지 않고, 송금자 및 금융 기관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개발자, 채굴자, 유효성 검사자, 월렛 SW 공급자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서 규제 명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
-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페리안 보링(Perianne Boring) CEO는 현재 미국에서 블록체인 개발자·기업을 위한 규제 명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법안 도입을 촉구
- 블록체인 업계는 '21년 제안된 인프라 법안이 개발자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규제 준수를 요구해 일상적 업무 수행을 저해해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저해했다는 불만이 크게 확산한 상태

- 미 하원 톰 에버 의원이 '21년 제안된 인프라 법안이 광범위하게 정의한 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을 발의했고, 블록체인 업계가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등 큰 호응에 나섬
- 동 법안은 암호화폐 수탁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송금자 및 금융 기관으로 취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및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규제 대상 폭을 대대적으로 줄임

[출처]

- Cryptopotato, 'Tom Emmer Introduces Bill to Protect Blockchain Developers', 2023.03.23.
- Tom Emmer, 'Emmer Introduces Bill to Provide Regulatory Clarity for the Blockchain', 2023.03.23.